

1권 목차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1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93
3	대기환경보전법	167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75
5	물환경보전법	421

0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목 차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제11조(배출권등록부)
제2절 배출권의 할당

제12조(배출권의 할당)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제14조(할당의 통보)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배출권의 거래)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제22조의4(감독 · 검사)
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 · 검증 및 인증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조의2(검증기관)
제24조의3(검증심사원)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 · 차입, 상쇄 및 소멸

제27조(배출권의 제출)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제29조(상쇄)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제31조(상쇄등록부)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제33조(과징금)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7장 보칙

제35조(금융상 · 세제상의 지원 등)
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제37조(실태조사)

제37조의2(청문)

제38조(이의신청 특례)

제39조(수수료)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및 과태료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제43조(과태료)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4. “계획기간”이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5. “이행연도”란 계획기간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획기간 내의 각 연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6.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이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국내외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2.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p> <p>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의 운영에 관한 사항</p> <p>4. 경제성장과 부문별·업종별 신규 투자 및 시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확장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전망에 관한 사항</p> <p>5.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물가 변동 등 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p> <p>6. 무역집약도 또는 탄소집약도 등을 고려한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p> <p>7.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자원조달,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사항</p> <p>③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이 변경을 요구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24.></p>	<p>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이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p> <p>⑤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25.></p>	
<p>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 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관한 사항 부문별·업종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량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식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수량 및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부문별·업종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여건 및 국제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정부는 계획기간 중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할당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정부는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p>	<p>한다.<개정 2022. 3. 25.></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24.></p>	<p>발생한 경우</p> <p>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의 기준·운영에 관한 사항</p> <p>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p> <p>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제29조에 따른 상쇄와 관련된 정책의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 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이하 “3차 계획기간”이라 한다)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p> <p>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p>⑥ 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⑦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의 기준·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p>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p>	<p>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p> <p>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배출권거래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할당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⑥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할당계획의 수립 준비 등 할당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된다.</p> <p>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p>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p>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3. 제28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p> <p>4.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p> <p>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p> <p>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p> <p>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23조제3항제2호”로 본다.</p> <p>⑥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로 본다.</p> <p>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p> <p>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한다.<개정 2020. 3. 24., 2021. 9. 24.> 1.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나.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2. 3. 25.> 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아.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1. 할당대상업체가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p> <p>2.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업체의 사업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한 명세서에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로 본다.<신설 2020. 3. 24., 2021. 9. 24.></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p>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p> <p>자.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p> <p>차.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및 시정요구</p> <p>카.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p> <p>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p> <p>파.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와 접수, 평가 및 공개</p> <p>하.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자격정지</p> <p>거.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등록</p> <p>너.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더.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p> <p>러.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의 승인 및 등록</p> <p>머.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버.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서.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채납처분</p> <p>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p> <p>저.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 처.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커.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터.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 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3. 25.>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 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p>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p> <p>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폐쇄해야 한다.</p> <p>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속한 사업장 또는 시설이 이전될 때 이 법에서 정한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 또한 승계된다. 다만, 분할·양수·임차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업체가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경우로서 이를 승계하여도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이전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가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p>	<p>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이를 승계한 업체가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승계된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에 이전(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배출권의 할당을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존부(存否)와 관계없이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p>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⑦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의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p> <p>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p> <p>⑫ 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p> <p>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변경·확장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2. 3. 25.></p> <p>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p> <p>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p> <p>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p> <p>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p> <p>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p> <p>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p> <p>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p> <p>아.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p> <p>자.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인·변경승인</p> <p>차.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및 시정요구</p> <p>카.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p> <p>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p> <p>파.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p> <p>하.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자격정지</p> <p>거.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등록</p> <p>너.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더.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p> <p>러.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의 승인 및 등록</p> <p>머.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버.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서.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채납처분</p> <p>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p> <p>저.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p> <p>차.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p> <p>커.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터.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p>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p> <p>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p> <p>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p> <p>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 3. 25.></p> <p>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p> <p>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p> <p>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p> <p>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p> <p>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2. 3. 2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배출권등록부) ①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를 둔다. ② 배출권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한다. ③ 배출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2. 할당대상업체, 그 밖의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배출권 계정 및 그 보유량 3.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 및 그 보유량 4.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 5. 그 밖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3. 25.>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②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의2제3항·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④ 배출권등록부는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개정 2021. 9. 24.></p> <p>⑤ 제20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p> <p>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할당량</p> <p>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p> <p>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p> <p>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p> <p>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p> <p>8.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p> <p>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p> <p>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p> <p>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법 제11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p> <p>2. 제2항 각 호의 사항</p> <p>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p> <p>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 align="center">제2절 배출권의 할당</p>		
<p>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 주무관청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한다. 다만, 신규진입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9. 24.></p>	<p>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개정 2022. 3. 25.></p> <p>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제4호·제6호·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p> <p>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1. 할당대상업체의 이행연도별 배출권 수요</p> <p>2.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p> <p>3. 제2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p> <p>4. 할당대상업체의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p> <p>5.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p> <p>6.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 및 국경경쟁력</p> <p>7.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p> <p>8.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목표 준수 실적</p>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p> <p>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 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p> <p>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p>	<p>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p> <p>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p> <p>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p> <p>6. 제품 생산량·용역량 또는 열·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p> <p>②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p> <p>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p> <p>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를 말한다.<개정 2021.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p>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p>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p>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②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계획기간 중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수집·측정·평가하는 방법 등을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p> <p>③ 할당신청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p>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제공하는 생산품목·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용역을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공정별 또는 원료·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용역을 생산·제공함에 따른 시설·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p>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1조(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이하 “배출량 산정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2. 제3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그에 따른 검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배출량 산정계획서와 그 검증보고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배출량 산정계획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15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한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해당 이행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할당의 통보) ① 주무관청은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배출권등록부의 각 업체별 계정에 그 할당 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당의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22조 제1항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제18조 제4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되는 이행연도를 표시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기 전에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을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하거나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과 배출권	제2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한다. 1. 삭제<2022. 3. 25.>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②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할당계획에 반영되거나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배출권 수량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p>	<p>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2차 및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p> $\text{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 = \frac{\text{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text{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p>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으로 정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배출권 예비분”이라 한다)에서 사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절차 및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p>제26조(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3.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p> <p>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4.></p> <p>[제목개정 2020. 3. 24.]</p>	<p>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p>제27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연료·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p>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p>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p> <p>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p> <p>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p> <p>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p> <p>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p> <p>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p> <p>6.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p> <p>제28조(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p> <p>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개정 2022. 3. 25.></p> <p>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p> <p>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p> <p>3.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p> <p>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p> <p>⑥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⑦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 1. 제5조제3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 총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3.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0. 3. 24.>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배출권 할당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 2.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 배출권 전부 <p>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50을 말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중 그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에서 그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7조제1항</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5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한다.</p> <p>⑦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p> <p>⑪ 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다.</p> <p>⑫ 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p> <p>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	제2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2.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 3. 제23조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 4.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5. 그 밖에 배출권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20. 3. 24.]</p>	<p>다른 조기감축실적(이하 “조기감축실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2022. 3. 25.> 2.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관리업체로 지정되어 최초로 목표를 설정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인정된 전체 감축목표량에 대한 초과달성분 <p>②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으려는 할당대상업체는 1차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 시작 이후 8개월 이내에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정된 조기감축실적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1차 계획기간의 2차 및 3차 이행연도분의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한다. 다만, 인정된 전체 조기감축실적이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은 할당대상업체별로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하여 할당되는 배출권의 총수량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p> $\text{조기감축실적 기여계수} = \frac{\text{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text{전체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의 합}}$ <p>④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수량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전체 배출권 수량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으로 정한다.</p> <p>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배출권 예비분”이라 한다)에서 사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절차 및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30조(배출권 예비분)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진입자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 2. 할당대상업체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의 배출권 보유로 인한 유동성 저해 방지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 등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 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p> <p>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p> <p>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p> <p>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p> <p>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p> <p>④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p>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 지 여부</p> <p>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p> <p>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p> <p>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p> <p>③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받은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정하여 거래소 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 거래소의 회원에 관한 사항 2. 배출권 거래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거래의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4. 배출권 거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배출권 거래시장의 감시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 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부정거래행위 등의</p>	<p>제34조(배출권 거래소의 설치·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배출권 거래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배출권 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면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p>④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폐쇄 및 운영 중단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 회원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배출권 거래의 수탁, 영업을 위한 관리기준의 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금지 및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p> <p>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정 및 그 감시에 관한 사항</p> <p>4. 장내거래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6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① 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주무관청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그 밖에 시장조성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가 더 이상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정기적으로 시장조성 활동 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실적을 평가</p>	<p>제31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를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되,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p> <p>③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래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 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거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장내거래”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장소에서 거래 <p>제37조(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배출권시장 조성자(이하</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하여 그 시장조성자로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시장조성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권의 매도 또는 매수 호가의 제시 2. 배출권의 거래 <p>②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1. 3. 23.></p> <p>③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파산·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활동 실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p>④ 시장조성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환경부장관에게 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평가할 때 배출권 거래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조성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기한까지 필요한 이행조치를 해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조성자의 지정 절차, 실적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당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 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될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100분의 25까지의 추가 할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p>제38조(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배를 말한다.</p> <p>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최근 1개월의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의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 배출권 평균 가격의 100분의 60 이하가 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하여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거래가 어려운 경우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외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이하 “시장 안정화 조치”라 한다)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설정을 철회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 6개월간 배출권 평균 보유량이 2만5천 배출권 미만인 거래 참여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최대 보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행연도 배출권의 100분의 70 이상 2. 최대 보유한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가 아닌 거래 참여자의 경우에는 직전 6개월간 배출권의 평균 보유량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 이하 ⑥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의 설정을 말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할당위원회가 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를 의결한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거나 종료하는 즉시 해당 시장 안정화 조치의 주요 사유 및 내용 또는 종료사실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정부”는 “주무관청”으로 본다.<개정 2021. 9.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규모·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배출시설·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4. 온실가스 배출시설·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5.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시설·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p> <p>6. 온실가스 사용·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에너지의 판매·구매 등 이동 정보</p> <p>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p> <p>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량 산정계획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p>제40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을 말한다) 5명 이상과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 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과 관련하여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법인일 것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3.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p> <p>4.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량</p> <p>② 삭제<2021. 9. 24.></p> <p>③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p>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검증기관의 업무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검증하는 업무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업무기준을 말한다.</p> <p>⑤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를 검증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하고, 할당대상업체는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세서의 내용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2. 명세서를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3. 실제 배출량과 명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p>⑥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검증기관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p> <p>⑧ 제7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지정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p> <p>⑨ 검증기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⑩ 제9항에 따라 수행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 명세서 검증 기준·절차, 검증업무 수행결과와 제출 및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 검증기관의 검증업무는 전문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검증심사원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41조(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이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③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이하 “검증심사원”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업무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④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검증심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자격취소를 통보받은 검증심사원은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 주무관청은 제24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다.</p>	<p>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②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4조에 따른 배출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수 있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p> <p>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1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2.></p> <p>⑤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개정 2023. 12. 12.></p>	
<p>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3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②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및 그 밖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p>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명세서에 대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 결과 2.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에 대한 부문별 관장기관의 검토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결과 4. 그 밖에 법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의 국제적 기준 부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중 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p>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인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법 제7조제2항제2호”는 “제43조제2항제2호”로 한다.</p> <p>⑥ 인증위원회의 회의, 개의·의결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할당위원회”는 “인증위원회”로 본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p>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2. 3. 25.></p> <p>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p> <p>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p> <p>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p> <p>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p> <p>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p> <p>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p> <p>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p> <p>아.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p> <p>자.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는 설치·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p> <p>차.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및 시정요구</p> <p>카.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p> <p>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 명령</p> <p>파.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p> <p>하.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자격정지</p> <p>거.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등록</p> <p>너.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더.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p> <p>러.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의 승인 및 등록</p> <p>머.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버.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서.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채납처분</p> <p>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p> <p>저.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p> <p>처.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p> <p>커.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과의 통보</p> <p>터.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p>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p> <p>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p> <p>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p> <p>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 3. 25.></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 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25.>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4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 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p> <p>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p>제45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p> <p>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times 100분의 15</p> <p>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times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times 100분의 50)]</p> <p>제47조(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p> <p>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 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51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2.></p> <p>⑤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개정 2023. 12. 12.></p>	
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① 배출권을 보유한	제45조(배출권의 차입)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p> <p>② 할당대상업체는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 또는 차입된 배출권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2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 시 제출해야 할 배출권의 수량보다 보유한 배출권의 수량이 부족하여 배출권 제출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100분의 15 2. 해당 계획기간의 2차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 직전 이행연도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할 수 있는 배출권 한도의 비율 - (해당 계획기간 내 직전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 중 차입한 배출권 수량의 비율 × 100분의 50)] <p>제46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의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2. 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p>②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③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47조(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p> <p>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29조(상쇄)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p>	<p>제47조(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p> <p>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① 제29조에 따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증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내외 부분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대통령령 	<p>제47조(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으로 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p> <p>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48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 취소)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외부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p> <p>② 외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해당 외부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다. 다만,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p> <p>3.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계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p> <p>4.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제8항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p> <p>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p>1. 상쇄 실적의 지속성 및 정량화된 검증 가능성</p> <p>2. 상쇄사업의 추진방법 및 모니터링의 적절성</p>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p> <p>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을 승인받은 경우</p> <p>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p> <p>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p> <p>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p> <p>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외부사업 및 제4항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⑦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외부</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사업을 말하며, 해당 사업의 종류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등 외부사업의 승인·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 2.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3. 그 밖에 부문별 관장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p>②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인증결과 및 해당 인증시 검토한 사항을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48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시 검토한 사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결과와 해당 인증시 검토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한다.</p>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인증하지 않는다. 다만,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서 직접 시행한 제48조제7항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서 201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2차 계획기간부터 인증할 수 있다.</p> <p>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인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로 발생되거나 그와 동일한 감축량을 다른 제도 또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활용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조약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령 개정,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일반적인 경영 여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p>⑥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부사업을 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⑦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기업 등의 기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의 기준 등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로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3.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4.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5.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6.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2.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p>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 업체의 지정·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p> <p>3.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4.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5.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6.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p>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2. 2. 22.></p> <p>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p>	
제31조(상쇄등록부) ① 제30조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업 온실가스 감축량 등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를 둔다.</p> <p>② 상쇄등록부는 주무관청이 관리·운영한다.</p> <p>③ 상쇄등록부는 배출권등록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p>		
<p>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33조(과징금)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p> <p>1. 할당대상업체가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p> <p>2. 할당대상업체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p> <p>② 주무관청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과징금)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금액은 배출권 제출의무가 있는 이행연도에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거래대금 합계를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도록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 부과사유, 예정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할당대상업체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한 예정금액과 납부기한대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12. 12.></p> <p>⑤ 환경부장관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24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8회 이내로 한다.<개정 2023. 12. 12.>	
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제품·시설·장비의 개발 및 보급 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 3. 온실가스 저장기술 개발 및 저장설비 설치 사업 4. 온실가스 감축모형 개발 및 배출량 통계 고도화 사업 5.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계수의 검증·평가 기술개발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p>	<p>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등의 촉진 및 설비투자 사업 8.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서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준하여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① 정부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성 있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와의 합의서에 기초하여 국내 배출권 시장을 국제 탄소 시장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협력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하는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4조(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하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2. 3. 25.> ②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및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p>	
<p>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p>	<p>제42조(배출량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할 때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신청 제15조에 따른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지정 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 취소·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득·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제25조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p>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기간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배출량이나 동종 또는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배출량 인증 결과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할 때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량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p>[본조신설 2020. 3. 24.]</p>		
<p>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고시된 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할당: 할당받은 날 	<p>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2. 3. 25.></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3.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이 추가 할당된 날</p> <p>4.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날</p> <p>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p> <p>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 지정취소 ·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p> <p>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 ·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p> <p>8.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의 인증: 인증받은 날</p> <p>9.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고지받은 날</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4. 1. 30.> [제목개정 2024. 1. 30.]</p>	<p>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p> <p>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p> <p>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p> <p>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 · 운영</p> <p>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 · 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p> <p>마.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p> <p>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p> <p>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p> <p>아.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p> <p>자.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 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 · 변경승인</p> <p>차.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 ·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및 시정요구</p> <p>카.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p> <p>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 · 보완 명령</p> <p>파.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 업무정지 · 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p> <p>하.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발급 및 자격취소·자격정지</p> <p>거.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등록</p> <p>너.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p> <p>더.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p> <p>러.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차입의 승인 및 등록</p> <p>머.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버.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운영</p> <p>서.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채납처분</p> <p>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운영</p> <p>저.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p> <p>처.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p> <p>커.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p> <p>터.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p>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p> <p>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p> <p>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p> <p>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p>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2. 3.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 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p>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25.></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p> <p>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p> <p>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4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2. 법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4.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 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p> <p>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p>제47조(상쇄)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전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안에서 시행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판매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③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당계획으로 정한다.<개정 2021. 3. 23.></p> <p>④ 상쇄배출권 중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않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쇄배출권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법 제38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p> <p>제55조(이의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 내용 등을 적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1.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거부: 그 거부를 통보받은 날</p> <p>2. 제37조제6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 요구: 그 시정 요구를 통보받은 날</p> <p>③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한다.</p> <p>1. 제48조제4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의 취소: 그 승인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p> <p>2. 제49조제5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인증의 취소: 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p> <p>④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따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p>	
<p>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1. 제11조제5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p> <p>2.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p>	<p>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p> <p>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1.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인 지 여부 2.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③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 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 는 자는 제16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고시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주무관청은 이 법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방안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법 제11조 및 제31조에 따른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 4. 법 제24조에 따른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조사·연구 5. 제15조, 제3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및 평가 법 제37조제5호의2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3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법 제43조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다음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지정취소 및 권리와 의무의 승계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관련 비율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제48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절차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절차에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위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검토 <p>④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22. 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8. 그 밖에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이 정하는 기관 	
<p>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검증심사원 <p>[본조신설 2018. 10. 16.]</p>		
<p>제8장 벌칙 및 과태료</p>		
<p>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p>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배출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偽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권 거래소의 회원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3.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을 제출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 받은 자 		
<p>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p>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2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p>		

0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목 차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8조(허가배출기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결격사유)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3조(오염도 측정)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자가측정)
제32조(기록·보존)
제33조(연간 보고서)
제34조(수수료)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제47조(과태료)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騒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카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p> <p>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p> <p>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p> <p>마.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p> <p>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p> <p>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p> <p>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p> <p>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p> <p>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p> <p>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활동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제21조의2제3항 및 제21조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10.></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시행일: 2025. 1. 1.]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 1. 17., 2022. 6. 10.></p> <p>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2. 6. 10.></p>		
<p>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p>		
<p>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p>		<p>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7.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p>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22. 6. 10.></p> <p>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p> <p>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 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p>	<p>제2조(통합허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별표 2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p> <p>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p> <p>④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개정 2021. 6. 29.></p> <p>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p>	<p>제4조(통합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에 따른다.</p> <p>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8. 1. 17.></p> <p>제6조(통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이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라 한다)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배출시설등의 신설, 증설, 교체, 변경 또는 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의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 	<p>다.<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p>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3. 12. 19.></p> <p>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할 것 	<p>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8.></p> <p>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출시설등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3 제1호(같은 호 가목22)부터 24)까지 및 다목4)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전 2. 영 별표 3 제1호가목22)·23), 같은 호 다목4), 같은 표 제2호가목·라목·마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3. 영 별표 3 제1호가목24)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4. 영 별표 3 제2호나목·다목·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p>④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p> <p>⑤ 법 제6조제4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일반현황 2.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3.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4.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5.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7. 1.></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p> <p>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1. 1. 5.></p> <p>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1. 1. 5.></p> <p>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 5.></p> <p>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1. 1. 5.></p>	<p>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p> <p>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것</p>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p>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p>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1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검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p>	<p>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법 제7조 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란 별표 4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제3조(사전협의)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7.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이하 “배출영향분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협의 신청서에 사전협의를 신청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신청 내용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협의 결과서를 사전협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p>④ 법 제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신청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p>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p>		<p>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8조(허가배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p> <p>2.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에 반영</p>		<p>제7조(검토 결과의 통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35일(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와 영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검토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검토 결과서”라 한다)를 같은 항에 따라 제출을 한 자(이하 “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된 환경의 질(質) 목표</p> <p>3. 배출시설등을 설치·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p> <p>③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및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호의 사항을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제출받은 서류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p> <p>2. 수정·보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p> <p>③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제출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서에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하 “허가배출기준”이라 한다)등을 포함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서 사본 1부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8조(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별표 5와 같다.</p> <p>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③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은 별표 7과 같다.</p> <p>④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의 판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p>	<p>제4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p>	<p>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8. 16.></p>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하 “최대배출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 주변의 토지 이용 변화, 폐수가 방류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의 특성 변화, 사업장 주변의 오염상태 악화 등 사업장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 또는 제조공정 등의 변경(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 및 공정의 운영·관리조건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작동이나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어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p>②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3. 12. 19.></p> <p>③ 법 제9조제3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1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고 유해한 오염물질등을 적절하게 취급·관리할 것 2.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적절한 환경관리기법을 	<p>따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계획을 해당 사업자(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자는 그 변경계획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계획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검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검토주기 설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p> <p>제29조(정보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적용할 것 3. 허가조건 및 시설 운영·관리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4.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변경허가,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변경신고: 「물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경보전법」</p> <p>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p> <p>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p> <p>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신고 및 변경승인·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p>		
<p>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p>③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허가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취소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p> <p>④ 사업자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p>		
<p>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p>		
<p>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p> <p>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p>[본조신설 2021. 6. 29.]</p>	<p>제9조의2(통합허가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제1호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당한다)</p> <p>3.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7. 1.]</p>
<p>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본조신설 2021. 1. 5.]</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4.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측정·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p>②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통합허가서류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제9조의3(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 해당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10년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배출영향분석에 대한 서류를 포함한다):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후 5년 <p>② 법 제11조의4제1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업무분야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물질등의 오염도와 배출농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도 및 공정도의 제작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비산배출시설에 관한 현황조사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확보를 위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분야 <p>③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대행 업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할 것 2.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p>④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7. 1.]</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3. 통합허가대행업자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p> <p>③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실적을 승계한다.</p> <p>④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 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p>		<p>제9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4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본조신설 2021. 7. 1.]</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5.]		
제11조의6(업무의 폐업·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5(업무의 폐업·휴업)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 폐업·휴업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통합허가대행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통합허가대행 실적 없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7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수행실적 분야 2. 기술인력 분야 3. 업무수행능력 분야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 <p>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1. 7. 1.]</p>
<p>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21. 1. 5.]</p>		<p>제9조의7(대행 실적의 보고) ① 법 제11조의9제1항에서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 체결 실적 2.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기술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p>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대행계약 체결(변경, 이행)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보고: 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변경 실적 보고: 대행변경계약서 사본 1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3.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인력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본조신설 2021. 7. 1.]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9조의8(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각 호의 해당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해당 분야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1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교육경비 등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 대한 교육경비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부담한다.<신설 2023. 12. 29.> [본조신설 2021. 7. 1.]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濫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p> <p>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 동안 제14조, 제15조, 제41조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이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제5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 제1호가목3)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배출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별표 3 제1호가목7)에 해당하는 경우 3. 별표 3 제1호가목14)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3 제1호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 중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3 제1호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 중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배출시설등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p>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황산화물 감소 시설 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법 제2조제2호사목의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 3.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그 방지시설을 설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p>제10조(가동개시 신고 등) ① 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일)을 말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동개시 신고필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의 시설: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2. 영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까지.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까지 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 <p>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다만,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13조(오염도 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2. 해당 배출시설등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된 사항 외의 오염물질등이 배출되는지 여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p>	<p>제11조(오염도 측정 기간 및 검사기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p> <p>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 1. 17., 2020. 2. 24., 2020. 11. 23., 2021. 7.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환경전문심사원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6.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기관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등은 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에 측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오염물질등을 측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7. 수소이온농도 8. 수질자동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9. 소음 10. 진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자체 개선) ①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스스로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단전·단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개선 사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기간에 개선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체 개선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 개선이행보고</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 완료되었는지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제14조(개선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지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6조(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개선명령의 이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 대상 및 개선 사유 2. 개선 사유별 조치 사항 3.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하는 내용 4.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예상 배출량 및 배출농도(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p>	<p>제12조(개선계획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지설 자체의 결함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지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 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지설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방지지설의 처리능력 명세서 1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나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선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및 개선 결과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3항에 따른 개선이행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 1. 17.></p> <p>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p> <p>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p> <p>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p> <p>1. 기본배출부과금</p> <p>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p>	<p>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text{기본배출부과금} = \text{기준이내 배출량} \times \text{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times \text{사업장별 부과계수} \times \text{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농도별 부과계수} \times \text{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p>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배출부과금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5조제3항제6호에서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배출하는 농도의 수준</p> <p>2.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여부</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p> <p>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p> <p>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p> <p>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1. 16.></p> <p>제10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준초과 배출량,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정액부과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p> <p>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허가배출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정액부과금</p> <p>② 공동방지사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사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p> <p>제11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등) 법 제15조 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이란 별표 9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p>	
<p>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p>제13조(배출부과금의 감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대상별 감면비율은 별표 11과 같다.</p> <p>②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절차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료구매계약서(같은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한다)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p> <p>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p>		<p>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p> <p>3. 영 별표 1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배출부과금의 납부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제9조제2항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정배출량의 제출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p>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p>	<p>제17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하로 한다. 2. 초과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까지로 하며,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하로 한다.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하로 한다. 4. 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p>제17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⑤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p>
<p>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p>	<p>제18조(측정기기 부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계, 유속계,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적산전력계 나. 용수 측정용 및 폐수 측정용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 다. 수질자동측정기기(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p>② 제1항 각 호의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별 부착 대상·방법·시기 및 측정 대상·항목·방법</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착 대상·방법·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은 별표 12와 같다.</p> <p>③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할 때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확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18. 1. 16.></p>	
<p>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하여 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p>제19조(측정기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p> <p>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 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p>	<p>제19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20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원인 및 조치명세서 1부 2.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서 1부 3. 조치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에 대한 법 제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p>	<p>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 결과”는 “조치 결과”로 본다.</p> <p>제21조(측정 결과의 전산처리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측정 결과의 처리·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2. 수질오염물질 관련 측정기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p>조제1항에 따른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 계획서 1부</p> <p>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 17.></p>	<p>제22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년 2. 법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p>제22조(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 인정)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p> <p>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p> <p>2.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p> <p>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p> <p>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p>	<p>측정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1개월</p> <p>3. 법 제2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관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6개월</p> <p>②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명령 이행을 위한 계획서의 작성·제출·보완, 이행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조치명령”으로, “개선계획서”는 “조치계획서”로, “개선 대상”은 “조치 대상”으로, “개선 사유”는 “조치 사유”로, “개선기간”은 “조치기간”으로, “개선이행보고서”는 “조치이행보고서”로, “개선결과”는 “조치결과”로 본다.</p>	<p>처리가 어려운 경우</p> <p>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석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제6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회석처리의 불가피성 3. 회석배출 및 회석량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석을 통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회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회석배출 및 회석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p> <p>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p> <p>제24조(조치계획서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치계획서에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이행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p> <p>②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p> <p>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p> <p>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p> <p>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p> <p>2.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p> <p>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p> <p>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p> <p>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p>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23. 1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3. 12. 19.></p>	<p>제25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법 제6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통합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이하 “통합환경관리인”이라 한다)을 통합환경총괄관리자와 통합환경일반관리자로 구분하여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③ 법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서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4의3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5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은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한다.</p> <p>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별표 14의5 제1호에 따른 자격취득 교육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5조의4(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2. 6. 10.]</p> <p>[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산업협회(이하 “환경산업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4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p>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에 발급받은 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p>③ 환경산업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5조의5(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 등) ①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관리인 선임·해임·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해임서·퇴직서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선임하려는 통합환경관리인이 법 제2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 경력증명서 등 별표 14의2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의 명단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사업주는 법 제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5조의6(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 대행) 통합관리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직무를 해당 호에 따른 사람이 대행하게 해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1. 통합환경총괄관리자의 직무: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다만,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를 겸하고 있어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직무: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통합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p> <p>[본조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5조의10(교육경비) 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감독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 		<p>제25조의7(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① 법 제21조의3 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총괄 2. 통합환경일반관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3.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통합환경총괄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한 조치</p> <p>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22. 6. 10.]</p> <p>[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3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②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p> <p>1.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그 밖에 사업장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2. 통합환경일반관리자: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1조의4(보수교육) ①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p> <p>1. 최초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p> <p>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p> <p>③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p>		<p>제25조의8(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은 별표 14의5 제2호와 같다.</p> <p>제25조의10(교육경비) ① 법 제21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취득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이 경우 교육경비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② 법 제2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자가 부담하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3. 12. 29.]</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4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에 대한 보수교육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5. 1. 1.] 제21조의5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5조의9(교육의 위탁) ① 법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산업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보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p>②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취득교육 이수확인증 및 통합환경관리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p> <p>③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내용 및 방법 <p>⑤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p> <p>14.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p> <p>15.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p> <p>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2025. 1. 1.] 제2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23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p>	<p>제23조(과징금 부과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받은 경우(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최적가용기법</p>		
<p>제24조(최적가용기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p>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수정·보완 주기 등)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기준서”라 한다)의 수정·보완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업종별 시설의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26조(최적가용기법 마련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독성 물질 등 유해성이 낮은 물질의 사용 여부 2.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피해의 최소화 여부 3. 환경관리기법의 적용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p>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p> <p>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p> <p>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p> <p>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p> <p>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p>		<p>제27조(기술작업반)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이라 한다)은 영 별표 1 각 호에 따른 업종별로 각각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기술작업반원은 환경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업종별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 분야 전문가 2.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시설·공정 전문가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건설팅회사에 소속된 자 5.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p>③ 기술작업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제28조(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적가용기법 적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조건, 방법, 융자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최적가용기법의 적용 여부,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수 있다.<개정 2021. 7. 1.></p>
<p>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개정 2020. 5. 26.></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25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입물질 및 오염배출 현황 2.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3. 사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등 저감 기법의 현황 4. 오염물질등 저감에 대한 기술개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최적가용기법 마련 및 기준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조사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문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보내야 하며,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제29조(정보 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경우</p> <p>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 방법·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공무원 1명 이상</p> <p>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하 “기준이내 배출량”이라 한다)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p>	<p>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다. 이 경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및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기본배출부과금 = 기준이내 배출량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등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p> <p>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12조에 따른 부과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의 수질자동측정기기(이하 “자동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한 사업장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자가측정 결과,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확정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p>	<p>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p> <p>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p> <p>1. 영업수행실적 분야</p> <p>2. 기술인력 분야</p> <p>3. 업무수행능력 분야</p> <p>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p> <p>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1. 7. 1.]</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 동방지시설”이라 한다)에 오염물질등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자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자별로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총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사업자 간 미리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1. 16.> </p> <p>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 6. 29.>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업무 13. 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p>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 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4. 배출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2. 배출시설등의 허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지식·기술을 갖추었을 것 4.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① 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영업수행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통합허가대행업자 영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라 한다)에 공시해야 한다. 1. 영업수행실적 분야 2. 기술인력 분야 3. 업무수행능력 분야 4. 법령준수 및 신인도 분야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심사원(이하 “환경전문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사원”이라 한다)에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1. 7. 1.]</p> <p>제30조(환경전문심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검토·변경을 위한 기술지원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원 4. 자가측정을 위한 기술지원 5.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7. 그 밖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전문심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p>제30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p>제31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p> <p>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p> <p>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p> <p>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p> <p>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p> <p>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p> <p>6.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p>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의 출입·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2.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p> <p>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p> <p>1.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p> <p>3.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누락된 경우</p> <p>4.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p> <p>5.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p> <p>6.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검사할 수 있다.</p> <p>⑥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⑦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31조(자가측정)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3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항목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 연결된 배출구별로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오염물질등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등은 자가측정의 항목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0. 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영 제21조에 따른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자동으로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에서 측정·전송하는 오염물질등. 이 경우 먼지를 자동측정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매연도 자동으로 측정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해당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3. 연소조절에 의한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이 항상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 그 폐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중 해당 처리시설에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③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조건에 그 측정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p> <p>④ 자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6에 따른 오염물질별 최소 측정횟수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유해성 여부 2. 측정대상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 수준 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계획 4. 그 밖에 오염물질등의 배출 특성 및 해당 오염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한 측정방법 및 측정횟수를 제7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제33조(자가측정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입력 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할 때에 사용한 시료채취 기록부 및 여과지를 그 측정한 날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32조(기록·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p>제34조(기록·보존의 방법 등) ① 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 연료·원료·부원료 및 용수 사용량, 주요 약품 등의 구입·소비량, 그 밖에 법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대상자료의 범위 및 입력 방법·주기, 입력한 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및 환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2.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정한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측정한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p>	<p>제35조(연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한 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2. 24.></p> <p>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이행에 관한 사항</p> <p>2. 법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3.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4.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결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보존 내용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할 때에는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0. 2. 25.> 1.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제31조(출입·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출입·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p>[시행일: 2025. 1. 1.] 제3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마련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수정·보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운영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운영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0. 2.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확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감면 및 조정 등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p>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하게 하거나 수시로 출입·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정기검사의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3.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배출시설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p>③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환경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역오염도가 심화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이 1개월 또는 2회 이상 지연·누락된 경우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오염피해 진정 등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검사할 수</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p> <p>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p> <p>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p> <p>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p> <p>13.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14.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p> <p>제3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23. 12.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p>있다.</p> <p>⑥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p>⑦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은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을 말한다.</p> <p>[시행일: 2025. 1. 1.] 통합관리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 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3. 12. 19.>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시행일: 2025. 1. 1.] 제3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1항 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p>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p> <p>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 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p> <p>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자</p> <p>1의2.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합허가대행업을 한 자</p> <p>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p> <p>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1의5. 제11조의4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p> <p>1의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p> <p>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p>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p>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p>[시행일: 2025. 1. 1.]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p>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6. 10.></p> <p>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p> <p>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1. 5.></p> <p>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p> <p>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p> <p>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p> <p>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 1. 5.></p> <p>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p> <p>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p>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2호, 2023. 12. 19.,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p>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p> <p>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p> <p>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p> <p>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6. 10.></p> <p>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p> <p>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p> <p>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시행일: 2025. 1. 1.] 제47조제3항제1호, 제47조제3항제2호, 제47조제3항제3호, 제47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p>		

03

대기환경보전법



목 차

3. 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시 측정 등)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 삭제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총량규제)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사업장의 분류)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33조(개선명령)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제37조(과징금 처분)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9조(자가측정)
제40조(환경기술인)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9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5조(인증의 취소)
제56조(과징금 처분)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
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 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 삭제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제76조의8 삭제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6장 보칙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제79조(회원)
제80조(업무)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5조(청문)
제86조(수수료)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제90조의2(벌칙)
제91조(벌칙)
제91조의2(벌칙)
제92조(벌칙)
제93조(벌칙)
제94조(과태료)
제95조(양벌규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 등의 종류)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3. 6. 20., 2024. 7. 23.>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가. 전기자동차: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나.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다.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p> <p>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p> <p>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p> <p>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p> <p>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p> <p>② 법 제2조제1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신설 2023. 6. 20.></p> <p>1. 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p> <p>2. 수소전기건설기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건설기계로서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p> <p>[본조신설 2020. 3. 31.] [제목개정 2023. 6. 20.] [중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3. 31.>]</p>	<p>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p> <p>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p> <p>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p> <p>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p> <p>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p> <p>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p> <p>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p> <p>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p> <p>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환경부령으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p> <p>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p> <p>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p> <p>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p> <p>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p> <p>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 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6. 30.] [제목개정 2023. 6. 28.] [종전 제79조의9는 제79조의10으로 이동 <2021. 6. 30.>]</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p> <p>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p> <p>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p> <p>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p> <p>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p> <p>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p> <p>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p> <p>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p> <p>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km)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p> <p>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3. “냉매(冷媒)”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 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p> <p>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p> <p>[제목개정 2016. 1. 27.]</p>		<p>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7. 14., 2010. 12. 31., 2011. 8. 19., 2013. 5. 24., 2014. 2. 6., 2016. 6. 2., 2019. 2.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2011. 8. 19.>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조의3(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이하 “환경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1.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위성의 개발 2. 환경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4. 환경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검증 및 개선사업 5.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6.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p> <p>7. 그 밖에 환경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7. 26.]</p> <p>[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3. 31.>]</p>	
<p>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p>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3. 21., 2014. 1. 14.></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p>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5. 23.]</p>		<p>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의 방법과 절차)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한다.</p>
<p>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p>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개정 2019. 2.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p>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3. 31.>]</p>	
<p>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p> <p>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p>제1조의5(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대상기관)</p> <p>법 제7조의3제1항에서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p>[본조신설 2014. 2. 5.]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20. 3. 31.>]</p> <p>제1조의6(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통합관리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경우</p> <p>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p> <p>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 계획서</p> <p>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p> <p>3.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7은 제1조의8로 이동 <2020. 3. 31.>]</p>	
<p>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21.></p> <p>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3. 1. 31., 2014. 2. 5., 2016. 7. 26.></p> <p>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개정 2012. 7. 20., 2014. 2. 5., 2019. 2. 8.></p> <p>1. 미세먼지(PM-10)</p> <p>2. 초미세먼지(PM-2.5)</p> <p>3. 오존(O3)</p> <p>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2. 5., 2019. 2. 8.></p> <p>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p> <p>2.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p> <p>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p>	<p>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29.></p> <p>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p> <p>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p> <p>3.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 사항</p> <p>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1. 31.,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 	
<p>제9조(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재사용·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③ 환경부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9조의2 삭제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 삭제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풍속,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5. 23., 2022. 12. 27.>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의 개선을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관찰에 관한 사항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 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 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p>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 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지원 및 참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 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 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2. 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개정 2012. 2. 1.>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 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 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 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 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제15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 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 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12. 5. 23., 2019. 4. 2., 2020. 12. 29.></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20. 12. 29.></p> <p>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7. 21., 2020. 12. 29.></p> <p>⑦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 5. 23., 2020. 12. 29.></p>		
<p>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p>		<p>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011. 7. 21., 2019. 4. 2., 2021. 1. 5.></p> <p>②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p> <p>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p>		<p>2020. 5. 27.></p> <p>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p> <p>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p> <p>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p> <p>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21조 삭제		
<p>제22조(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1. 총량규제구역</p> <p>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p> <p>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p> <p>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 15.></p> <p>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p>	<p>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20., 2015. 12. 10., 2016. 3. 29., 2021. 10.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p>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4. 2. 5., 2015. 12. 10., 2019. 7. 16., 2021. 10.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p>	<p>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14.,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중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15.></p> <p>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p> <p>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4. 13.></p>	<p>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0.></p> <p>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p> <p>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p> <p>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개정 2013. 1. 31., 2015. 12. 10., 2019. 7. 16.></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신설 2021. 10. 14.></p> <p>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p> <p>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p> <p>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p>	<p>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p>1. 공정도</p> <p>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p> <p>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p>[제목개정 2013. 1. 31.]</p> <p>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p> <p>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p>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중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개정 2015. 12. 10.></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한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p> <p>④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개정 2019. 7. 16.></p> <p>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p>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p> <p>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p> <p>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p> <p>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 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 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p>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p>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류는 제외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17., 2009. 6. 9., 2017. 1. 17., 2024. 1. 30.>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9. 1. 15.> ③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9., 2019. 1. 15., 2024. 1.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 30.>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 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2. 1.>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19. 7. 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 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p>		<p>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 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p>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제38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 27.></p> <p>②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제1항(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개정 2012. 2. 1., 2016. 1. 27., 2020. 12. 29.></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신설 2012. 2. 1.,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 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증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한 부분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100분의 30을 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7. 16.>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4. 방지지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29조(공동 방지지설의 설치 등) ① 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지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지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는 공동 방지지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 공동 방지지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지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공동 방지지설의 설치·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지설(이하 “공동 방지지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지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지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1. 공동 방지지설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공동 방지지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을 적은 서류와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지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지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지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지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지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지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지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2019. 7. 16.>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 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2024. 5. 13.>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2024. 5. 13.>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 26.>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 1., 2015. 1. 20., 2019. 1. 15.>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검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2017. 12. 28., 2022. 5. 3., 2023. 6.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신설 2010. 12. 31., 2017. 12. 28., 2023. 6.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개정 2015. 12. 10.></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4. 시설관리 및 운영자</p> <p>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p> <p>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p> <p>[전문개정 2009. 1. 14.]</p>
<p>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5.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 	<p>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2. 5.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p>	<p>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p> <p>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p> <p>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p> <p>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 5. 23.></p>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p> <p>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p>	<p>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 1. 31.></p> <p>③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 1. 31.></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 31., 2016. 3. 29.></p> <p>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 5. 3.></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 31., 2022. 5. 3.></p> <p>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2019. 4. 2.></p> <p>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착·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신설 2012. 5. 23., 2015. 1. 20.></p> <p>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 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p>	<p>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7. 16.></p> <p>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관제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5. 3.></p> <p>1. 굴뚝 자동측정기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p> <p>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5. 3.></p> <p>[제목개정 2022. 5. 3.]</p> <p>제19조의2(측정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의 30분 평균치(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 명칭,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연간배출량 등 전산처리한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 방법에</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3. 31.]</p> <p>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p> <p>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p> <p>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p> <p>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p> <p>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p> <p>다.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p> <p>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p>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p> <p>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p> <p>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p> <p>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p>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개정 2022. 5. 3.></p> <p>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5.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p>[본조신설 2017. 1. 24.]</p>	<p>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p> <p>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 26.] [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4는 제37조의5로 이동 <2022. 5. 3.>]</p> <p>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여금 측정기기의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2.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여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할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3.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 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17. 1. 26.] [제37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7조의5는 제37조의6으로 이동 <2022. 5. 3.>]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p> <p>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p> <p>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p> <p>[본조신설 2017. 1. 26.]</p> <p>[제37조의5에서 이동 <2022. 5. 3.>]</p>
<p>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p>	<p>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7. 16.></p> <p>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p> <p>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p> <p>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p> <p>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p> <p>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p> <p>다.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p> <p>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 3. 31.></p> <p>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30분 평균치로 한다.</p> <p>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p> <p>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3. 1. 31., 2019. 7.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p>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p>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21. 6. 29.></p> <p>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10. 3. 26., 2016. 3. 29.></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p>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21. 6. 29.></p> <p>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10. 3. 26., 2016. 3. 29.></p>	<p>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p>
<p>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p>	<p>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p> <p>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p> <p>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개정 2012. 2. 1., 2015. 1. 20.></p> <p>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p> <p>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p> <p>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p> <p>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p> <p>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p> <p>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p> <p>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p> <p>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12. 2. 1., 2019. 11. 26.></p>	<p>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2. 5. 3.></p> <p>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p> <p>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 1. 31.></p> <p>③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 1. 31.></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 31., 2016. 3. 29.></p> <p>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시설은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 5. 23., 2016. 12. 27.></p> <p>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 7. 21.></p> <p>⑧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개정 2012. 5. 23.></p> <p>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2020. 3. 24.></p> <p>[제목개정 2012. 2. 1.]</p>	<p>시설로 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는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2. 5. 3.></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 31., 2022. 5. 3.></p> <p>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31.,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p>②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31., 2018.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 <p>제27조(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부분 단서에 따른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p> <p>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1. 31.></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법 제35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법 제35조의3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7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3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5.> [제37조에서 이동 <2013. 1. 31.>]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12. 2. 1.]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31., 2020. 5. 26.>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2. 공정상 발생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31., 2020. 5. 26.>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1. 연료구매계약서 사본(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료를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한다) 2.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3.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개정 2020. 4. 3.>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에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 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③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 1. 31.></p> <p>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9. 22., 2013. 1. 31.></p> <p>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p>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31.></p>	<p>대기오염물질별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p> <p>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4.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부과기간 동안의 대기오염물질 감축실적서(대기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p>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9. 7. 16., 2020. 4. 3.></p>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과금을 부과(법 제35조의3에 따른 조정 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개정 2015. 12. 10.></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 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법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7. 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②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⑤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p>	<p>③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p> <p>④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3. 1. 31.]</p>	
<p>제36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p>	<p>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 15., 2019. 11. 26., 2020. 12. 29., 2021. 4. 13.></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 신고를 한 경우</p> <p>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p> <p>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p> <p>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p> <p>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p>	<p>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p> <p>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21. 6. 29.></p> <p>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10. 3. 26., 2016. 3. 29.></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p> <p>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p> <p>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p> <p>20.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 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p>	<p>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예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신설 2012. 2. 1.,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0. 12. 29.></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p>	<p>있는 경우</p> <p>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p> <p>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p>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0.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p>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6. 29.]</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2020. 3. 24.></p> <p>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2. 2. 1.></p> <p>⑥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p>		
<p>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이 없는 경우 : 100분의 100 2. 처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105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p>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21. 6. 29.></p> <p>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수는 각 배출구마다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개정 2010. 3. 26., 2016. 3. 29.>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 1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 15.>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1. 제품생산 공정도 및 비산배출시설 설치명세서 2. 비산배출시설별 관리대상물질 명세서 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4. 별표 10의2 제1호가목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적용 제외 시설의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0. 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2021. 10. 14.>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1. 26., 2021. 10. 14.>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운영 신고를 한 비산배출시설의 규모(별표 10의2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별 분류가 동일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주기·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p> <p>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p> <p>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p> <p>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p> <p>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p> <p>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1. 4. 13.></p> <p>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신설 2021. 4. 13.></p> <p>⑫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p>		<p>비산배출시설의 시설 용량의 합계 또는 시설 개수의 누계를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p> <p>3.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p> <p>4.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경우</p> <p>5. 비산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 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1. 26., 2019. 7. 16., 2020. 4. 3., 2021. 10. 14.></p> <p>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1. 26., 2021. 10. 14.></p> <p>[본조신설 2015. 7. 21.]</p> <p>[중전 제51조의2는 제5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1.>]</p> <p>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개정 2015. 7. 21.></p> <p>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개정 2015. 7. 21., 2019. 7. 16.></p> <p>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개정 2015. 7. 21.,</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 27., 2019. 1. 15., 2021. 4. 13.> [전문개정 2015. 1. 20.] [제목개정 2016. 1. 27.]</p>		<p>2019. 7. 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5. 7. 21.> 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2017. 1. 26., 2019. 7. 16.> [본조신설 2013. 5. 24.] [제51조의2에서 이동 <2015. 7. 21.>]</p>
<p>제39조(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p>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p> <p>④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p>	<p>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p>	<p>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14.,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개정 2015. 12. 10.></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p> <p>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p>1. 공정도</p> <p>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p> <p>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p>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p> <p>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p> <p>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p> <p>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중전의 연료보다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p> <p>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p> <p>④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개정 2019. 7. 16.></p> <p>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2종·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0. 12. 31., 2017. 12. 28.></p> <p>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개정 2011. 8. 19.></p> <p>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 5. 27.></p> <p>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p> <p>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p> <p>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6. 30.></p> <p>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0. 5. 27., 2021. 6. 30.></p>
<p>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p> <p>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p> <p>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 2022. 5. 3.></p> <p>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p> <p>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p> <p>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5.></p> <p>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 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p> <p>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p> <p>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6.>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	제40조(저황유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개정 2008. 12. 31.>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3. 1. 31.>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p>	<p>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p> <p>④ 삭제<2013. 1. 31.></p>	
<p>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 펄나무와 숯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과정 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 	<p>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p>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p> <p>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p>	
<p>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p>	<p>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p>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 2020. 12. 29.></p> <p>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p> <p>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p>	<p>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p> <p>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p> <p>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p> <p>7. 운송장비 제조업</p> <p>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p> <p>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p> <p>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p> <p>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p>	<p>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 4. 17., 2013. 5. 24., 2015. 12. 31., 2017. 12. 28.></p> <p>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6., 2021.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제목개정 2012. 5. 23.]</p>		<p>해당한다)</p> <p>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1. 6. 30.></p> <p>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3. 5.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5. 24.></p> <p>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4.></p> <p>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3., 2015. 1. 20.,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5.></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9. 1. 15.></p> <p>⑤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p>	<p>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3. 1.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4.></p> <p>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 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중전 제59조는 제59조의2로 이동 <2015. 7. 21.>]</p> <p>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5. 24.></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4.> [제59조에서 이동 <2015. 7. 21.>]</p> <p>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 15.></p> <p>⑥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p> <p>⑦ 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⑧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 2021. 4. 13.></p> <p>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p> <p>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p> <p>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⑪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p>		<p>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5. 24., 2015. 7. 21., 2021. 6. 30.></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5. 24.></p> <p>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 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1. 4. 13.></p> <p>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신설 2021. 4. 13.></p> <p>⑬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 2019. 1. 15., 2021. 4. 13.></p> <p>⑭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 2019. 1. 15., 2021. 4. 13.></p>		<p>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p>
<p>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p>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p> <p>[본조신설 2012. 5. 23.]</p> <p>[제목개정 2015. 1. 20.]</p>	<p>③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도료의 공급·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p>[본조신설 2015. 7. 20.]</p>	
<p>제44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0.></p> <p>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 1. 3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4. 1. 30.></p> <p>[본조신설 2015. 12. 1.]</p>		
<p>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p>	<p>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2019. 4. 2.></p> <p>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2019. 4. 2.></p>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1. 15.></p> <p>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 15., 2021. 4. 13.></p>	<p>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 31., 2015. 7.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3. 1.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9. 1. 15.></p> <p>②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개정 2019. 1. 15.></p> <p>[본조신설 2012. 5. 23.]</p>		
<p>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 15.></p> <p>②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 7. 16.]</p>		<p>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p> <p>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로 한다.</p> <p>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분(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61조의3에서 이동 <2015. 7. 21.>]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2012. 2. 1., 2019. 4. 2., 2022. 12. 27.>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 27.>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7.>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p> <p>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p> <p>2. 배출가스저감장치</p> <p>3. 저공해엔진</p> <p>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4. 2., 2022. 12. 27.></p> <p>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 12. 31., 2024. 1. 23.></p> <p>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23.></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23.></p>	<p>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10. 3. 26., 2013. 3.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2008. 12. 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p>제64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28., 2024. 1. 23.></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7. 11. 28., 2024. 1. 23.></p>	<p>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p>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동기의 인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영 제4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p>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출력·적재중량·동력전달장치·운행여건 등 자동차의 특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배출가스시험 2.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변화정도를 검사하는 내구성시험.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열화계수를 적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강제열화 방식을 활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참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 12. 31., 2019. 12. 20.>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수입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4.>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개정 2010. 12. 31., 2013. 2. 1.>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5. 7. 21.></p> <p>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1.></p> <p>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4., 2010. 12. 31., 2012. 10. 26.></p> <p>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 12. 31., 2012. 10. 26.></p> <p>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6., 2022.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5.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신청 <p>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신설 2009. 7. 14., 2024.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p>②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 7. 14., 2024.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p>③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이 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4. 7. 24.></p> <p>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자동차배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한다.<신설 2024. 7. 24.></p> <p>⑥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7. 14., 2024. 7. 24.></p> <p>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개정 2024. 7. 24.></p> <p>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8. 11. 29.] [중전 제67조의2는 제6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p>
<p>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p>	<p>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p>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p> <p>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 11. 28., 2020. 12. 29., 2024. 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6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08. 12. 31.] 	<p>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p> <p>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3. 1. 31.]</p>	<p>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26., 2018. 11. 29., 2021. 6. 30., 2024.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시설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p>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4.> [본조신설 2009. 7. 14.] [제6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7조의3은 제67조의4로 이동 <2018. 11. 29.>]</p> <p>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6.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인력 2. 시설장비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 6. 30.>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인증시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1. 6. 30., 2024. 7. 24.></p> <p>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4. 11.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p>⑤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4. 11. 12.></p>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67조의3에서 이동 <2018. 11. 29.>]</p>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p> <p>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본조신설 2008. 12. 31.]</p>		
<p>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2. 5. 23.]</p>	<p>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p> <p>② 법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6. 29.></p> <p>[본조신설 2013. 1. 31.]</p>	
<p>제49조(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p>	<p>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p>	<p>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 2. 1.></p> <p>⑤ 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 2. 1.></p> <p>⑥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2. 2. 1.></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6. 12. 27.></p> <p>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p>	<p>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p> <p>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p> <p>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6. 29.></p> <p>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p> <p>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p>	<p>한다.</p> <p>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p> <p>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p> <p>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p> <p>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 <p>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p> <p>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p> <p>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p> <p>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본조신설 2012. 10. 26.]</p> <p>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p> <p>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p> <p>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p> <p>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2. 26.]</p>	<p>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전문개정 2013. 5. 24.]</p> <p>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5. 24., 2014. 2. 6.></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3. 5. 24.></p>
<p>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p> <p>②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에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 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p> <p>[본조신설 2012. 2. 3.]</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 12. 30.></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p> <p>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제작자의 평균 배출량 적용대상 차종 인증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2. 당해연도 초과분 발생사유 3. 상환기간 내 차종별 판매계획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12. 2. 3.]</p>
<p>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p>②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p>		<p>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①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p> <p>⑤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p> <p>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p>		<p>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제작자가 정하는 사용안내서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거나 그에 준하여 사용하고 정비한 자동차 2. 원동기의 대분해수리(무상보증수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3. 무연휘발유만을 사용한 자동차(휘발유사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4. 최초로 구입한 자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5. 견인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 6. 사용상의 부주의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고장을 일으키지 아니한 자동차 7. 그 밖에 현저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5. 24.></p> <p>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p> <p>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검사차량 10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⑤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차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p> <p>1.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검사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⑥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p> <p>1.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⑦ 자동차제작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21. 12. 30.]</p> <p>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30.></p> <p>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4. 3., 2021.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다.<신설 2021. 12. 30.>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2. 30.>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5. 12. 1.>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3.]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2.>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30.>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아니하다.<개정 2017. 11. 28., 2020. 5. 26.></p> <p>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1., 2017. 11. 28.></p> <p>③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1., 2017. 11. 28.></p> <p>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 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p> <p>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p>	<p>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p> <p>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2.,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목개정 2018. 11. 27.]</p> <p>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p>[본조신설 2016. 5. 31.]</p> <p>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2., 2016. 5. 31., 2018.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p>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4. 3., 2021. 12.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p> <p>④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2. 30.></p> <p>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p>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9.></p>	<p>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합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p> <p>② 삭제<2018. 11. 27.> [제목개정 2018. 11. 27.]</p>	<p>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6.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 요구 비율 및 산정 근거 2. 부품의 결함시정 내용 3. 결함을 시정한 부품이 부착된 자동차의 명세(자동차 명칭, 배출가스 인증번호, 사용연료) 및 판매명세 4.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명세(부품명칭·부품번호) <p>③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 2018. 1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건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결함시정요구율 및 그 산정근거 2. 결함을 시정한 부품의 결함발생원인 3.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근거 <p>④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6. 6. 2., 2017. 9.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형 승용차·화물차, 초대형 승용차·화물차, 이륜자동차(50cc 이상만 해당한다)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2년 2. 건설기계 원동기, 농업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1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정화용촉매 및 전자제어장치: 5년 나. 가목 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3년 <p>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p> <p>①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 1. 23.]</p>		<p>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데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p> <p>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등 자동차점검·정비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증빙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p>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4. 7. 24.]</p>
<p>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2022.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다)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26.> 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7. 1. 26.>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26.> [본조신설 2013. 2. 1.] [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3으로 이동 <2013. 2. 1.>]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1. 27., 2016. 12. 27., 2024. 1. 23.></p> <p>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p> <p>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p> <p>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6. 12. 27.></p> <p>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1.></p>		
<p>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p> <p>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7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9. 4. 2.]</p>		<p>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 5. 24.]</p> <p>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p> <p>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20. 4. 3.]</p> <p>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p>[본조신설 2020. 4. 3.]</p>
<p>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2022. 12. 27.></p>	<p>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2. 5. 22., 2013. 1. 31., 2014. 12. 31., 2015. 7. 20., 2016. 5. 31., 2016. 7. 26., 2017. 1. 24., 2017. 12. 26., 2018. 11. 27., 2018. 12. 31., 2020. 3. 31., 2020. 5. 26., 2021. 6. 29., 2023. 6. 20., 2024. 7.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 	<p>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 8. 17., 2024. 5.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별표 17 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같은 표 제2호바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p> <p>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p> <p>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p> <p>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신설 2012. 2. 1., 2020. 5. 26.></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19. 4. 2., 2021. 4. 13., 2022. 12. 27.></p> <p>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p> <p>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p> <p>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p> <p>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p>	<p>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p>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p> <p>2의3. 삭제<2018. 11. 27.></p> <p>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p> <p>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p> <p>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p> <p>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p> <p>5. 삭제<2013. 1. 31.></p> <p>6. 삭제<2013. 1. 31.></p> <p>7. 삭제<2013. 1. 31.></p> <p>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p> <p>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p> <p>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p> <p>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p>	<p>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p> <p>나.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에 따른 장비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2006년 전에 제작된 자동차</p> <p>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p> <p>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4. 5. 13.></p> <p>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p> <p>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p> <p>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検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p> <p>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p> <p>3.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p> <p>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4. 3.]</p> <p>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교체하거나 개조·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p> <p>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p> <p>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p> <p>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p> <p>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p> <p>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p> <p>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9. 4. 2., 2020. 5. 26., 2021. 4. 13., 2022. 12. 27.></p> <p>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p>	<p>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p> <p>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p> <p>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 상태 수시 점검</p> <p>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p> <p>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p> <p>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p> <p>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p> <p>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23. 5. 23.></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3. 6. 20.></p> <p>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p>	<p>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② 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18. 11. 29., 2020. 4. 3.></p> <p>[본조신설 2013. 2. 1.]</p> <p>[중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13. 2. 1.>]</p> <p>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저공해자동차</p> <p>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p> <p>나. 판매가격</p> <p>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p> <p>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p> <p>마.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p> <p>바.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p> <p>2. 저공해건설기계</p> <p>가. 판매가격</p> <p>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2020. 12. 29.>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p> <p>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5., 2016. 12. 27.></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5., 2016. 12. 27.></p> <p>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7.></p> <p>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p> <p>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또는 제1항에 따</p>	<p>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p>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6. 30., 2012. 5. 22., 2018. 12. 31., 2023. 5. 23.></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20. 5. 26.></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3. 6.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p>[제목개정 2018. 11. 27.]</p>	<p>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p> <p>[전문개정 2023. 6. 28.]</p> <p>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6. 30., 2024. 5.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p>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신설 2013. 2. 1., 2014. 2. 6., 2017. 12. 28.></p> <p>[본조신설 2008. 9. 19.]</p> <p>[제7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4는 제79조의5로 이동 <2021. 6. 30.>]</p> <p>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2022. 12. 27.></p> <p>⑫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신설 2019. 4. 2., 2020. 5. 26.></p> <p>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2020. 5. 26., 2022. 12. 27.></p> <p>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p> <p>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2019. 4. 2.></p> <p>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p>		<p>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9. 7. 14., 2013. 2. 1., 2017. 12. 28., 2020. 4. 3.></p> <p>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12. 28.></p> <p>③ 삭제<2021. 6. 30.></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0. 4. 3.></p> <p>[본조신설 2008. 9. 19.]</p> <p>[제7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5는 제79조의6으로 이동 <2021. 6. 30.>]</p> <p>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1. 20.,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2022. 12. 27.></p> <p>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2022. 12. 27.></p> <p>⑲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2022. 12. 27.></p>		<p>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4.] [제7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6은 제79조의7로 이동 <2021. 6. 30.>]</p> <p>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클리닝, 무상점검, 콜모니터링 및 그 밖의 사후관리 2. 재사용·재활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선별 및 관리 3.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회수·보관·매각 등 4. 운행차 저공해화 또는 저공해·저연비자동차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5.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 <p>[본조신설 2013. 5. 24.] [제7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7은 제79조의8로 이동 <2021. 6. 30.>]</p> <p>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7.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3.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가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엔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제79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8은 삭제] </p> <p>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 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8.>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목개정 2023. 6. 28.] [종전 제79조의9는 제79조의10으로 이동 <2021. 6. 30.>] </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2018. 12. 31., 2020. 4. 3., 2021. 6. 30., 2023.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p>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2023. 6. 28.></p> <p>[본조신설 2016. 7. 27.] [제목개정 2023. 6. 28.] [제7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0은 제79조의11로 이동 <2021. 6. 30.>]</p> <p>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자동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에너지밀도(단위 무게 또는 단위 부피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나.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에너지밀도 및 자체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다. 전기건설기계에 탑재된 원동기의 제작서·종류·출력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라.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자동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나. 충전에 걸리는 시간 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2. 전기건설기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기건설기계의 구성 및 전기장치의 제원 나. 그 밖에 전기건설기계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3. 6. 28.]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p> <p>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 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 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 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 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 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 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의 작성방법·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p>	<p>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 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p> <p>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 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 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 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 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 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 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 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 인 경우 	<p>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 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p> <p>[제79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2는 제79조의13으 로 이동 <2021. 6. 30.>]</p> <p>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 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실적 2.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저감량 3. 보급계획 미달성 사유(보급실적이 보급계획에 미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p>[본조신설 2020. 4. 3.]</p> <p>[제7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3은 제79조의14로 이동 <2021. 6. 30.>]</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27.] [중전 제52조의4는 제52조의5로 이동 <2022. 12. 27.>]</p>	
<p>제58조의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등)</p> <p>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p>		<p>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29.] [중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2020. 12. 29.>]</p>		
<p>제58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12. 29.] [중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20. 12. 29.>]</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p> <p>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p> <p>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p> <p>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채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달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27.] [중전 제52조의4는 제52조의5로 이동 <2022. 12. 27.>]</p>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7로 이동 <2020. 12. 29.>]</p>	<p>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개정 2021. 6. 29.></p> <p>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6.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p>[본조신설 2020. 3. 31.] [제5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5는 제52조의6으로 이동 <2022. 12. 27.>]</p>	<p>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21. 6. 30.></p> <p>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개정 2021. 6. 30., 2022. 12. 28.></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 [제79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5는 제79조의16으로 이동 <2022. 4. 12.>]</p> <p>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p>
<p>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이하 “구매·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8로 이</p>	<p>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p> <p>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개정 2021. 6. 29.></p> <p>② 법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 6. 29.></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동 <2020. 12.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본조신설 2020. 3. 31.] [제5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2조의5는 제52조의6으로 이동 <2022. 12. 27.>]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9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의10(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3. 6. 28.>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단위별 구축 목표 2. 고속도로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 3.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목표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 2. 인구수, 소득수준,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79조의16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17은 제79조의18로 이동 <2022. 4. 12.>]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p>제58조의11(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4. 13.] [법률 제18028호(2021. 4. 13.)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함]</p>	<p>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법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p>④ 법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p>[본조신설 2021. 6. 29.] [제52조의5에서 이동 <2022. 12. 27.>]</p>	
<p>제58조의12(인·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지정·인가·협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p> <p>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p> <p>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p> <p>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p> <p>②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0.></p> <p>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24. 1. 3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1. 30.></p> <p>[본조신설 2021. 4. 13.]</p> <p>[법률 제18028호(2021. 4. 1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 2020. 5. 26.></p> <p>②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p>		<p>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p> <p>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9. 5. 21., 2012. 5. 23.></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09. 5. 21.></p>		<p>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군단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p> <p>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p> <p>[본조신설 2010. 1. 6.] [제79조의18에서 이동 <2022. 4. 12.>]</p>
<p>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23. 8. 16.></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③ 삭제<2019. 4. 2.></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5. 23., 2019. 4. 2.></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p> <p>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p>		<p>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3. 31.]</p> <p>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7. 27., 2020. 4. 3., 2022. 12. 28., 2023. 6. 28.></p> <p>1. 공회전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료를 내야 한다.</p> <p>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8. 16.></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p> <p>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8. 16.></p> <p>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8. 16.></p> <p>⑩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p> <p>[제목개정 2012. 5. 23.]</p>		<p>2. 공회전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p> <p>3.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 여부 설명서</p> <p>4.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p> <p>5. 제품 보증에 관한 서류</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7. 27., 2020. 4. 3., 2022. 12. 28., 2023. 6. 28.></p> <p>1. 성능변경 시 변경하려는 인증내용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서류</p> <p>2.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 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0. 4. 3.></p> <p>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개정 2020. 4. 3.></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개정 2016. 7. 27., 2020. 4. 3., 2022. 12. 28., 2023. 6. 28.></p> <p>[본조신설 2013. 5. 24.]</p> <p>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출력, 연비 등 성능 시험 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p>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하려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하 “저감효율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p>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20. 4. 3.]</p> <p>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p> <p>②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수량(제조량·수입량·공급량 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거래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4. 조치계획 수량 5. 조치명령의 이행 예상 기간 6.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7. 그 밖에 조치명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p>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 대상 장치의 명칭 2. 조치를 완료한 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3. 재발방지 대책 [본조신설 2024. 2. 15.] [중전 제82조의2는 제82조의3으로 이동 <2024. 2. 15.>]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1.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 한국환경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주행온도 조건 및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 적정히 유지되는지 여부 등 성능을 확인받을 것 2. 개조·교체한 저공해엔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0. 4. 3., 2024. 2. 15.>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2. 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4. 2.></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8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24. 2. 15.>]</p> <p>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p>[본조신설 2013. 2. 1.]</p> <p>[제8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4는 제82조의5로 이동 <2024. 2. 15.>]</p> <p>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p> <p>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p> <p>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 [제8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5는 제82조의6으로 이동 <2024. 2. 15.>]</p>
<p>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절차·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p> <p>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교체 또는 개조·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3. 2. 1.] [제8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6은 제82조의7로 이동 <2024. 2. 15.>]</p> <p>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20. 4. 3.></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1.] [제8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7은 제82조의8로 이동 <2024. 2. 15.>]</p> <p>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개정 2020. 4. 3., 2024. 2. 15.></p> <p>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대수가 5대 중 2대를 초과하거나, 5대의 평균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의 5분의 4 미만인 경우</p> <p>2. 저공해엔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3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p> <p>나.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5대 중 2대 이상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항목에서 5대의 평균가스 배출량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020. 4. 3.></p> <p>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 개선계획서 3.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명세서 4. 결함시정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 결과의 통지계획서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 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개정 2020. 4. 3., 2024. 2. 15.></p> <p>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p> <p>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5. 7. 21., 2016. 12. 30.></p> <p>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1.></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60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2.]</p>		<p>[본조신설 2013. 2. 1.] [제8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8은 제82조의9로 이동 <2024. 2. 15.>]</p> <p>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법 제82조 및 이 규칙 제131조제1항제7호의4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본조신설 2020. 4. 3.] [제8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9는 제82조의10으로 이동 <2024. 2. 15.>]</p> <p>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개정 2024. 2.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시검사(제82조의11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p> <p>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구성이 제82조제1항제1호와 다른 경우 <p>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4. 3.]</p> <p>[제8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82조의10은 제82조의11로 이동 <2024. 2. 15.>]</p>
<p>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1., 2013. 7. 16.></p> <p>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p> <p>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3. 2. 1., 2013. 5. 24., 2017. 1. 26.></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2. 삭제<2013. 2. 1.>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신설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3. 5. 24.]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013. 7. 16.></p> <p>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p> <p>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13. 7. 16.></p> <p>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p> <p>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7. 16.></p> <p>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2020. 5. 26.></p>		<p>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1. 14., 2023. 5.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p>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p> <p>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p> <p>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p>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p> <p>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2. 11. 14.></p> <p>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11. 14.> [본조신설 2014. 2. 6.]</p> <p>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개정 2014. 2. 6.></p> <p>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 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4. 2. 6., 2021. 2. 5.></p> <p>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1. 2. 5.></p> <p>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신설 2014. 2. 6.> [제목개정 2014. 2. 6.]</p> <p>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종류, 사용연료, 연식, 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률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결과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3. 3., 2013. 3. 23.> [제목개정 2014. 2. 6.]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1. 14., 2023. 5. 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 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1. 14., 2023. 5. 25.>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6.]</p> <p>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 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p> <p>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p>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p>		<p>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2. 6.]</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p>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개정 2019. 4.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p>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p> <p>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20.></p> <p>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p>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p> <p>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p> <p>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p> <p>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p> <p>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p>[제목개정 2013. 2. 1.]</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규·변경·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4조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중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본조신설 2013. 1. 31.]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 2017. 1. 26.>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p>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2. 2. 1.]</p>		<p>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7., 2013. 2. 1.></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p> <p>[제목개정 2013. 2. 1.]</p> <p>제104조(배출가스 점검·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p> <p>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 2. 1.]</p> <p>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26., 2022.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 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26.></p> <p>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17. 1. 26.></p> <p>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1. 26.></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26.></p> <p>[본조신설 2013. 2. 1.]</p> <p>[중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3으로 이동 <2013. 2. 1.>]</p> <p>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17., 2013. 2. 1., 2017. 1. 26.></p> <p>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2. 1.></p> <p>④ 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17., 2013. 2. 1., 2017. 1. 26.></p>
<p>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6.></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p>		<p>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1., 2017. 1. 26.></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p> <p>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p> <p>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p> <p>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p>		<p>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p> <p>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7., 2013. 2. 1.></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2. 1.> [제목개정 2013. 2. 1.]</p>
<p>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p>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3. 7. 16.></p> <p>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2. 1.></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신설 2012. 2. 1.></p> <p>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p>		<p>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4. 17., 2013. 2. 1., 2017. 1. 26.></p> <p>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3. 2. 1.></p> <p>④ 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8. 4. 17., 2013. 2. 1., 2017. 1. 26.></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1., 2013. 7. 16.>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 2. 1., 2017. 1. 26.>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2. 1.> [제목개정 2013. 2. 1.]
제71조 삭제		
제72조 삭제		
제73조 삭제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3. 7. 16.>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8. 12. 31.>		제11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116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 터 3년으로 한다.<신설 2020. 12. 29.></p> <p>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 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 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 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 다.<신설 2012. 5. 23., 2020. 12. 29.></p> <p>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 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 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7. 16., 2020. 12. 29.></p> <p>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p> <p>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p> <p>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 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⑧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 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p> <p>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p> <p>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 조합</p> <p>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p> <p>[제목개정 2009. 7. 14.]</p> <p>제117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 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 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 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 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 표 34와 같다.</p> <p>제120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 료) ①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 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6. 2., 2021. 12. 30.></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 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31.]</p> <p>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⑨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p> <p>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제목개정 2008. 12. 31.]</p>		<p>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p>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3.></p>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실 또는 사업장의 주소 3.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p>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5.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첨가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의 경우: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결과서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5. 13.></p> <p>[본조신설 2021. 12. 30.]</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p> <p>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5. 23.,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p>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29.></p> <p>[본조신설 2008. 12. 31.]</p>		<p>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3.></p> <p>[본조신설 2009. 7. 14.]</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p> <p>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14.]</p> <p>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p>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p>[본조신설 2009. 7. 14.]</p> <p>제121조의3(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능력(검사원의 자격 및 수) 2. 시설·검사장비 <p>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기술능력을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검사장비가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검사장비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4., 2017. 12. 28.>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4.> [제목개정 2017. 12. 28.]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31.]		
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 2020. 12.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7. 16., 2020. 12. 29.> [제목개정 2013. 7. 16.]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1.]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9.>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p>		
<p>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3.4.5></p>		
<p>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p> <p>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자의 치료 및 수술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형 승합자동차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p>[본조신설 2014. 2. 6.]</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신설 2015. 7. 2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5. 7. 21.> [본조신설 2014. 2. 6.]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차제작자는 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4.></p> <p>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제출시기, 차이분·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3. 4. 5.]</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23.></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24. 7. 23.></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2. 5.]</p>	<p>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p>
<p>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p>	<p>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p> <p>②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3. 4. 5.]</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⑤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법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2. 12. 27.]</p> <p>[중전 제52조의4는 제52조의5로 이동 <2022. 12. 27.>]</p> <p>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p> <p>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①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23.></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24. 7. 23.></p> <p>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2. 5.]</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76조의7 삭제		
제76조의8 삭제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신설 2017.11.28>		
<p>제76조의9(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p> <p>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p> <p>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p>
<p>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p>		<p>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p>		<p>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사용기기 매매·임대·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제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 11. 29.]</p>
<p>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p>	<p>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p>[본조신설 2018. 11. 27.]</p>	<p>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 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본조신설 2017. 11. 28.]</p>		<p>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p> <p>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p>		<p>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11. 28.]</p>		<p>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p> <p>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p> <p>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p> <p>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p> <p>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p> <p>가.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p> <p>나. 제1호나목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p> <p>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p>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삭제<2022. 4. 12.>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8. 11. 29.]</p>
<p>제76조의13(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p>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용도별·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판매·수입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29.]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냉매사용기기 매매·임대·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제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8. 11. 29.]
제6장 보칙 <개정 2013.4.5>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9.></p>	<p>2012. 5. 22., 2013. 1. 31., 2014. 12. 31., 2015. 7. 20., 2016. 5. 31., 2016. 7. 26., 2017. 1. 24., 2017. 12. 26., 2018. 11. 27., 2018. 12. 31., 2020. 3. 31., 2020. 5. 26., 2021. 6. 29., 2023. 6. 20., 2024. 7. 23.></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p> <p>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p>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에 위한 사업</p> <p>2의3. 삭제<2018. 11. 27.></p> <p>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p> <p>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p> <p>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p> <p>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p> <p>5. 삭제<2013. 1. 31.></p> <p>6. 삭제<2013. 1. 31.></p> <p>7. 삭제<2013. 1. 31.></p> <p>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p> <p>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p>	<p>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6. 30., 2010. 12. 31., 2016. 12. 30., 2021. 6. 30., 2023. 8. 16.></p> <p>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p> <p>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1. 14.></p> <p>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p> <p>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p> <p>1. 환경기술인의 명단</p> <p>2. 교육이수자의 실태</p> <p>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 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 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 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23. 5. 23.>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3. 6. 20.></p> <p>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p> <p>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p> <p>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6. 30., 2012. 5. 22., 2018. 12. 31., 2023. 5. 23.></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20. 5. 26.></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3. 6. 20.></p> <p>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p> <p>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p> <p>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p> <p>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p> <p>[제목개정 2018. 11. 27.]</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이 교육·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1.]</p>		<p>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털 사이트 구축·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p>[본조신설 2010. 1. 6.]</p>
<p>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p>[본조신설 2012. 5. 23.]</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22. 12. 27.></p> <p>②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2. 2. 1.></p> <p>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1.></p> <p>④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1.></p> <p>[제목개정 2012. 2. 1.]</p>	<p>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2. 5. 22., 2013. 1. 31., 2014. 12. 31., 2015. 7. 20., 2016. 5. 31., 2016. 7. 26., 2017. 1. 24., 2017. 12. 26., 2018. 11. 27., 2018. 12. 31., 2020. 3. 31., 2020. 5. 26., 2021. 6. 29., 2023. 6. 20., 2024. 7.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 2의3. 삭제<2018. 11. 27.> 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 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2013. 1. 31.> 6. 삭제<2013. 1. 31.> 7. 삭제<2013. 1. 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 	<p>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상태 2.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종류 3.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별 결제정보(「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1. 6. 30.]</p> <p>[제목개정 2023. 6. 28.]</p> <p>[종전 제79조의9는 제79조의10으로 이동 <2021. 6. 30.>]</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p> <p>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p> <p>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p> <p>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p> <p>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p> <p>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p> <p>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p> <p>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p> <p>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p> <p>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p> <p>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23. 5. 23.></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3. 6.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p>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6. 30., 2012. 5. 22., 2018. 12. 31., 2023. 5. 23.></p> <p>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20. 5. 26.></p> <p>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3. 6.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의 매각 [제목개정 2018. 11. 27.]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전문개정 2012. 2. 1.]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p>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제조·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p> <p>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2. 2. 1.]</p>		
<p>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 13.,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p>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p>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p> <p>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p> <p>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p> <p>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p> <p>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p> <p>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p> <p>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 2. 1.></p> <p>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6. 20.></p>	
<p>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p>	<p>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14., 2014. 2. 6.></p> <p>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 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리기준 준수 여부, 황합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3.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1의2. 삭제<2017. 11. 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합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p>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 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부과금의 조정)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 2020. 3.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했거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 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p>	<p>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p> <p>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중전의 연료보다 황합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11. 3. 31.,</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지정된 자</p> <p>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p> <p>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p> <p>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p> <p>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p> <p>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p> <p>9. 전문정비사업자</p> <p>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p> <p>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p> <p>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p> <p>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p> <p>12의3. 냉매회수업자</p> <p>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5. 23.></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31.></p> <p>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개정 2015. 12. 10.></p> <p>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 31., 2019. 7. 16.></p>	<p>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p>1. 공정도</p> <p>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p> <p>3.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11. 3. 31., 2012. 6. 15., 2013. 5. 24., 2014. 2. 6., 2016. 7. 1., 2019. 7. 16.></p> <p>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④ 시·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p> <p>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1. 20.></p>		<p>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p> <p>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p> <p>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p> <p>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p> <p>4.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중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5.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p> <p>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p> <p>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p> <p>④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개정 2019. 7. 16.></p> <p>제131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2. 1., 2013. 5. 24., 2014. 2. 6., 2019. 7. 16., 2020. 4. 3., 2021. 6. 30., 2021. 12. 30., 2022. 4. 12., 2024. 2. 15.></p> <p>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p> <p>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4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7의4. 법 제60조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여부 확인,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2013. 2. 1.>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통관리 현황,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 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p>④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2. 4. 12.></p> <p>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p>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변경 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1.]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방기기의 개선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자동차의 차령 제한 자동차의 통행 제한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 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제5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p> <p>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p> <p>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도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p>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p>③ 법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0.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p>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④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6. 29.]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2. 2. 1.]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5., 2013. 2. 1.>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 2. 1., 2024. 7. 24.>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3. 2. 1.>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7. 16.></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p>	<p>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6. 30., 2013. 1. 31., 2014. 2.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 명령 3.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법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12. 31., 2009. 2. 13., 2009. 6. 30., 2013. 1. 31., 2014. 2. 5., 2015. 7. 20., 2016. 7. 26., 2017. 1. 24., 2019. 7. 16., 2020. 3. 31., 2021. 6. 29., 2024. 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삭제<2024. 2. 6.> <p>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의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4의6. 법 제3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의 인정 4의7. 법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의8. 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85조제1호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9.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4의10.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조치명령 4의11. 법 제35조 및 제35조의3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조정 등 4의12. 법 제35조의4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4의13. 법 제36조제1항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청문 4의14. 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7.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 4의18.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회수명령 4의19.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급·판매의 중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지명령 4의20.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4의21.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4의22.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성능점검 결과의 접수 4의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중지 및 제품의 회수명령 6의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급·판매의 중지명령 6의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채취·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 12. 31.,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3. 1. 31., 2014. 2. 5., 2016. 5. 31.,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4. 7. 23.></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p>3.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p> <p>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p> <p>3의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p> <p>4.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 및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p> <p>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생략</p> <p>6.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p> <p>7.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p> <p>7의2. 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변경인증 및 인증 취소</p> <p>7의3.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에 대한 저감효율 확인 검사</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7의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p> <p>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검사</p> <p>8의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p> <p>9. 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p> <p>제65조(보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6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 2. 13., 2009. 6. 30., 2010. 3. 26., 2012. 5. 22., 2013. 1. 31., 2014. 12. 31., 2015. 7. 20., 2016. 5. 31., 2016. 7. 26., 2017. 1. 24., 2017. 12. 26., 2018. 11. 27., 2018. 12. 31., 2020. 3. 31., 2020. 5. 26., 2021. 6. 29., 2023. 6. 20., 2024. 7. 23.></p> <p>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p> <p>1의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p> <p>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p> <p>2의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사업</p> <p>2의3. 삭제<2018. 11. 27.></p> <p>2의4.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려는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및 설치된 시설에 대한 성능확인 등의 업무</p> <p>2의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3.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2013. 1. 31.> 6. 삭제<2013. 1. 31.> 7. 삭제<2013. 1. 31.> 8. 법 제54조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8의2.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자에 대한 자금보조를 위한 지원 8의3.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8의4.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현황관리 8의5.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운영 8의6.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8의7.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평가 8의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수시 점검 9의2. 법 제76조의10제1항 및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9의3. 법 제76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발급</p> <p>9의4.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9의5. 법 제76조의14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의 접수</p> <p>9의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p> <p>10. 법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23. 5. 23.></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7. 26., 2017. 12. 26., 2018. 12. 31., 2020. 3. 31., 2021. 6. 29., 2023. 6. 20.></p> <p>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p> <p>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p> <p>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p> <p>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p> <p>④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6. 30., 2012. 5. 22., 2018. 12. 31., 2023. 5. 23.></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20. 5. 2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신설 2023. 6. 20.>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목개정 2018. 11. 27.]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판매하거나 공급·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9. 삭제<2012. 2. 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p> <p>4의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p> <p>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p> <p>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p> <p>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p>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p> <p>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p> <p>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p> <p>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9. 4. 2.]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한 자</p> <p>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p> <p>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p> <p>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p> <p>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p> <p>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p> <p>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p>		
<p>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2023. 8. 16., 2024. 1. 23.></p> <p>1. 제48조제3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자</p> <p>1의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p> <p>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p> <p>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2022. 12. 27.></p> <p>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p> <p>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 2021. 4. 13., 2023. 8. 16.></p> <p>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2. 삭제<2015. 1. 20.></p> <p>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p> <p>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p> <p>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p> <p>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p> <p>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p> <p>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 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2024. 1. 23.> 1. 삭제<2017. 11. 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p>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4.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p> <p>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p> <p>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p> <p>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기록·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7. 16., 2017. 11. 2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p>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9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목 차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사업자의 책무)
- 제6조(주민의 책무)
-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 시행)
- 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사무위원회)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 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 제16조(허가의 제한)
-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 제18조(이의신청)
-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 제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 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 제24조(허가의 취소 등)
- 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 제29조의2(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제32조(항만 · 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 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 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 · 세출)
-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7장 보칙

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청문)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과태료)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p> <p>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p>		
<p>제3조(「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제6조(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주택·산업·자동차·교통·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대기오염도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	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	제5조(대기환경연구지원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₃)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 	<p>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p>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8.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p>경연구지원단(이하 “연구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조달계획에 관한 사항</p> <p>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p> <p>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p>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고시되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및 산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p>제11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p>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p>	<p>가 대상계획</p>	
<p>제12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① 정부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④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p>	<p>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개정 2021. 8. 6.></p> <p>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p> <p>제13조(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p> <p>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p>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제13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p>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p>		
<p>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p>	<p>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p>	<p>제8조(사업장설치의 허가)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한다.<개정 2024.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건으로 붙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p> <p>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4. 1.></p> <p>⑥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p>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p> <p>⑧ 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4. 1.></p>		<p>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나.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p> <p>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이 경우 명세서는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p> <p>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p> <p>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이 경우 설치명세서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해야 한다.</p> <p>가. 사업장의 배치도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p> <p>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이 경우 도면은 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적어야 한다.</p> <p>가. 방지시설의 종류 나. 방지시설의 외형적 크기 다.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라. 방지시설의 설비용량</p> <p>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이 경우 유지관리계획서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p> <p>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p> <p>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세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장설치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p> <p>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p>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로서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p>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변경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8. 16.></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이나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p> <p>제10조(사업장의 설치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②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③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6조(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	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개정 2021. 4. 1.></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p>	<p>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p> <p>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p> <p>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p>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17조제1항·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p> <p>제13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p> <p>제16조(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 ①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은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이하 “배출계수”라 한다)에 해당 배출시설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이하 “배출계수별 단위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 배출계수별 단위량의 확인방법 등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한다.</p> <p>제17조(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량의 산정 결과(산정 근거자료를 포함한다)를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총량관리사업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전산망으로 전송해야 한다.<개정 2024. 8. 16.></p>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결과를 총량관</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p> <p>⑥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⑧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리사업자와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사업장별 배출량의 변동내용을 제22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개정 2024. 8. 16.></p>
<p>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3. 8. 16.]</p>	<p>제22조의2(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4. 8. 13.]</p> <p>제22조의3(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p>	<p>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법 제17조제1항·제8항,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 8. 13.]</p>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제22조의4(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경우</p> <p>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p> <p>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p> <p>5.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p> <p>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3. 8. 16.]</p>	<p>있다.</p> <p>1. 해당 시·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준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p> <p>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p> <p>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p> <p>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p> <p>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p> <p>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p> <p>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명칭, 할당 취소사</p>	<p>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p> <p>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p> <p>② 영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통보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량의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받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할당 취소량을 반영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4. 8. 16.]</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유, 사유 발생일, 할당 취소 신청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 할당 취소량, 취소 후 배출허용총량 등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4. 8. 13.]</p>	
<p>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3. 8. 16.]</p>	<p>제22조의5(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p>③ 시·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4. 8. 13.]</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제18조(이의신청)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p>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p>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p>	<p>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8. 16.></p> <p>②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사는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p>
<p>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p>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p>	<p>제19조(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퍼센트로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p> <p>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p> <p>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p> <p>④ 삭제<2023. 8. 16.></p> <p>⑤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이전을 포함한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를 이전 개시 3일 전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8. 16.></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일부터 3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그 확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1조(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양 및 지역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3과 같다.</p> <p>②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기관리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관리권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배출허용총량이 이전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p> <p>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4. 8. 16.]</p>
<p>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p> <p>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p> <p>④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23. 8. 16.]</p>	<p>제24조(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p> <p>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p> <p>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24. 8. 13.]</p>	<p>제21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4. 8. 16.]</p>
<p>제21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p>	<p>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p>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p>	<p>제11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및 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p> <p>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에 적고, 그 내용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야 한다. 법 제21조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24.>	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제23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①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p>	<p>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p> <p>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p>	
<p>제2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p> <p>2.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p> <p>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p> <p>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25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환</p>		<p>제24조(자발적 협약의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총량</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p>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3.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p>제25조(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이하 “협약기업”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2.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3.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4.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협약기업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p>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	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p> <p>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p>		<p>제27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결과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p>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p> <p>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p> <p>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p> <p>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p> <p>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p> <p>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하는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p> <p>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제29조(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의 무단 제거 또는 변경 금지</p> <p>2.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p> <p>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차량의 정비</p>
<p>제27조(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21. 4. 1.]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p>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p>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p>제3조(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p>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p> <p>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p>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p>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p>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p>제30조(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총 공사금액 100억원을 말한다.</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제32조(항만·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도지사는 생활	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p>	<p>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p>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5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①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p>제31조(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p>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32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 보일러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 3. 가정용 보일러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4.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유로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부품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관한 설명서(배출가스 및 열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한다) 2.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제33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인증시험 결과 3.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가정용 보일러의 배출가스 및 열효율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를 내줘야</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제36조(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p> <p>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p> <p>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p> <p>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p> <p>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p> <p>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p> <p>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국가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제7장 보칙		
<p>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p>		
<p>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에 따른 허가·신고·인증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 10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10만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무료 4.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 5만원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 8. 1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4의2.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4의3.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징수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제10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8. 13.></p>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 실적보고서 작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 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제37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측량을 거짓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공급 또는 판매한 자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3. 8.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8. 16.>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659호, 2023. 8. 16.,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33호, 2024. 8. 13., 일부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15호, 2024. 8. 16., 일부개정]
<p>한 자</p> <p>③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8. 16.></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8. 16.></p> <p>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23. 8. 16.></p>		

05

물환경보전법



목 차

5.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0조의3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제20조(낙시행위의 제한)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3조(오염원 조사)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제29조 삭제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제3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38조의7(결격사유)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40조(조업정지명령)
제41조(배출부과금)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43조(과징금 처분)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7조(환경기술인)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제49조의6(강제징수)
제49조의7(보고 등)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50조의2(기술진단 등)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1조의2(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51조의3(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제63조(결격사유)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제66조(과징금 처분)

제7장 보칙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9조(국고 보조)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2조(청문)
제73조(수수료)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을 말한다.</p> <p>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p> <p>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 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p> <p>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p> <p>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p> <p>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p> <p>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p> <p>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p>		<p>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p> <p>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p>[본조신설 2018. 1. 17.]</p> <p>[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1. 17.>]</p> <p>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p> <p>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 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p> <p>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p> <p>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p> <p>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p> <p>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p> <p>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다.</p> <p>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p> <p>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p> <p>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p> <p>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p> <p>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물환경의 목표 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 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p>	<p>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 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도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p>⑦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구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p> <p>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p>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p>	<p>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p> <p>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해당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p>②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역환경의 조사·분석 자료 2.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관한 분석 자료 3. 지역개발에 관한 과거와 장래의 계획에 관한 자료 4.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사용한 자료 5.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 <p>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2. 오염부하량의 저감계획이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3. 영 제4조제4호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을 것 <p>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p>	<p>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p>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p> <p>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p> <p>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p> <p>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p> <p>②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 17.></p> <p>1. 삭제<2012. 1. 17.></p> <p>2. 삭제<2012. 1. 17.></p> <p>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17.></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7.></p> <p>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p> <p>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p> <p>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p>	<p>한다)에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 19.></p> <p>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당시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이하 “총량관리단위유역”이라 한다)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p> <p>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이후 별표 7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년간 연속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총량목표수질보다 나쁜 지역</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19.></p> <p>②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로, “환경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본다.</p>
<p>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공공폐수처리시설</p> <p>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p>	<p>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p>②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p>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p>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p>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p>
<p>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p>	<p>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p>	<p>제17조(조치명령 등) 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 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본다.<개정 2021. 4. 13.></p>	<p>“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 16.></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p> <p>[제목개정 2018. 1. 16.]</p>	<p>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조치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9.></p> <p>④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받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2. 1. 19., 2024. 11. 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전문개정 2013. 7. 30.]</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p> <p>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과징금은 제105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할 것</p> <p>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 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2.0, 제2종사업장은 1.5, 제3종사업장은 1.0, 제4종사업장은 0.7, 제5종사업장은 0.4로 할 것. 다만,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부과계수는 2.0으로 한다.</p> <p>②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별표 22제2호가목8)나)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 1. 17.></p> <p>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 1. 17.></p> <p>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p>	<p>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 16.></p> <p>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p> <p>[제목개정 2018. 1. 16.]</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설 2017. 1. 1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7. 1. 17.> 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p>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① 법 제4조의9 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p> <p>② 조사·연구반의 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8. 1. 17.></p> <p>③ 조사·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p>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p>		<p>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물환경 정보에 대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과 연계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에 관한 정보</p> <p>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p> <p>[전문개정 2018. 1. 17.]</p> <p>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p> <p>1. 삭제<2018. 1. 17.> 2. 삭제<2018. 1. 17.> 3. 삭제<2018. 1. 17.> 4. 삭제<2018. 1. 17.> 5. 삭제<2018. 1. 17.></p> <p>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 17.></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p> <p>[본조신설 2017. 6. 26.]</p>
<p>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6조의2(물환경 연구·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환경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절 총칙 <개정 2013.7.30>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② 삭제<2017. 1. 17.>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2023. 5. 2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8. 1. 17., 2019. 10. 17.> 1.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③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1. 1. 12.></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2. 27.]</p>	<p>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p> <p>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p> <p>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p> <p>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p> <p>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검사에 관한 업무</p> <p>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p> <p>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p> <p>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p> <p>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2023. 5. 23.></p>	<p>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 지점 측정망</p> <p>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정보를 위한 측정망</p> <p>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중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p> <p>6.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p> <p>7. 퇴적물 측정망</p> <p>8. 생물 측정망</p> <p>9.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p> <p>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7.></p> <p>[제목개정 2019. 10. 17.]</p> <p>제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①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7., 2021. 12. 10.></p> <p>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을 관리하기 위한 측정망</p> <p>2. 도심하천 측정망</p> <p>3. 그 밖에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p> <p>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p> <p>1. 수질오염도 : 측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2. 수생태계 현황 :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 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은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면관리자는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면관리자가 수립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7.>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망을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망 운영기관 5. 측정자료의 확인방법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③ 삭제<2018. 1. 17.> [제목개정 2018. 1. 17.]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⑦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⑧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 [중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7. 1. 17.>]</p>		
<p>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2. 27.] [제9조의2에서 이동 <2017. 1. 17.>]</p>		<p>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7.></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p> <p>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2018. 1. 17.> 2. 삭제<2018. 1. 17.> 3. 삭제<2018. 1. 17.> 4. 삭제<2018. 1. 17.> 5. 삭제<2018. 1. 17.> <p>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한다.<개정 2018. 1. 17.>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본조신설 2017. 6. 26.]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0.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7.]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나무, 흙, 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수면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④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p> <p>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p>		
<p>제10조의2(물환경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이하 “물환경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1. 물환경목표기준의 달성 여부</p>		<p>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 년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p> <p>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환경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물환경목표기준 달성 여부의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신고,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18. 1. 17.]
제10조의3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하수관로,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제3항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13조(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계획을 해당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6. 4., 2014. 3. 24.>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4. 공공수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土砂)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p> <p>②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을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방제조치의 대집행(代執行)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한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위자등이 신속히 방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이 제5항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p>		<p>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수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5. 6. 16.]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5. 6. 16.>]</p> <p>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9.] [제2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2015. 6. 16.>]</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시·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방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사고 감시 2.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지원 3.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의 비치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수질오염 방제기술 관련 교육·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처리 <p>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 7. 30.]</p>	<p>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p>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8.]</p>	<p>[본조신설 2013. 12. 31.]</p> <p>[제26조의3에서 이동 <2015. 6. 16.>]</p>
<p>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제센터는 전국 하천·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顛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p>		<p>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 호소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p>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p>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p>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p> <p>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18조(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①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하거나 인가하려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 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공수역관리자”라 한다)에게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1. 16.]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은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할구역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③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p>	<p>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 3. 9., 2018. 6. 12.></p> <p>1. 하천·호소(湖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p> <p>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호소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p> <p>1. 법 제19조의2에 따라 물환경 보전조치를 이행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p> <p>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p> <p>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 16.></p> <p>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0. 11. 24.></p>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p> <p>[본조신설 2013. 7. 30.]</p>		<p>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p> <p>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온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p>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4. 1. 29.]</p>
<p>제20조(낙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7조(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의 지정 등)</p> <p>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낙시금지구역 또는 낙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p>제30조(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낙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3. 수질오염도</p> <p>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p> <p>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p> <p>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p> <p>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p> <p>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p> <p>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p> <p>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p> <p>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p> <p>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줄낚시는 제외한다)</p> <p>다. 1명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p> <p>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p> <p>마.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행위를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수질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p> <p>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배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p> <p>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밖에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p>
<p>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p> <p>② 삭제<2007. 5. 17.></p> <p>③ 삭제<2007. 5. 17.></p>	<p>제28조(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조류경보(藻類警報)</p> <p>2. 수질오염감시경보</p> <p>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1. 16.></p> <p>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④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정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30.></p> <p>⑤ 수질오염 정보의 종류와 정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 항목, 발령기준, 정보단계, 정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30., 2017. 1. 17.></p> <p>[제목개정 2013. 7. 30.]</p>	<p>④ 수질오염정보의 종류별·정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조류정보를 예측하기 위하여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관계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4.></p>	
<p>제21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p> <p>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 12. 12.></p> <p>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하천·호소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호소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호소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p>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6.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8. 6. 12.></p> <p>[제목개정 2018. 6. 12.]</p>	<p>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p>	<p>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의 수질오염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말한다)의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의 수질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0. 3. 22.]</p>	<p>차 및 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p>③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0. 6. 22.]</p>	
<p>제21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p>		<p>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 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p> <p> ② 제1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p> <p>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p> <p> ④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p> <p> [본조신설 2014. 3. 24.] </p>		<p>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보관·저장·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p>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3은 제30조의4로 이동 <2017. 1. 19.>] </p> <p>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p>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제3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의4는 제30조의5로 이동 <2017. 1. 19.>]</p> <p>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p>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3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하천·호소등을 수원(水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p>	<p>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p>[본조신설 2017. 1. 17.] [중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7. 1. 17.>]</p>	
<p>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p>		
<p>제22조(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기준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중권역은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또는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에 물,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이 조에서 “수생태계 연속성”이라 한다)의 단절·훼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결과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2023. 5. 23.></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p>	<p>집 및 수질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리·동 등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라 구분한다.</p> <p>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p>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p> <p>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2023. 5. 23.></p>	<p>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p> <p>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7.]</p> <p>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이 조에서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p>	<p>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환경생태유량”이라 한다)을 정하기 위하여 하천, 「소</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p> <p>② 환경부장관은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하는 경우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p> <p>③ 환경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이하 이 조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하천 또는 소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환경생태유량의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 그 밖의 건천화(乾川化)된 지류(支流) 또는 지천(支川)의 대표지점(이하 “대표지점”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2.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3. 건천 또는 건천화로 인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생태유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대표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 현황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2. 대표어종 선정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 16.]</p>	
<p>제23조(오염원 조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p>		<p>제32조(오염원의 조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 11. 27.></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전국적인 물환경 오염원의 변화 및 장기 전망 3. 물환경 관리·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에 대한 물환경 관리대책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6.] [중전 제29조의5는 제29조의6으로 이동 <2018. 1. 16.>]</p>	<p>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p> <p>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유역환경청장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권역별로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②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1. 9.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p> <p>④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⑤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본조신설 2018. 1. 17.]</p>
<p>제25조(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권역별로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목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4대강수계법에 따른 관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p>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 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중권역의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p> <p>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중권역의 물환경목표 기준 달성에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중권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할 중권역 및 인접한 상류지역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p> <p>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1. 17.></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 17.]</p>
<p>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 17.]</p>		
<p>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에도</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7. 1. 17.]</p>		
<p>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역 가운데 복원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할구</p>	<p>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p>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역의 복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원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다.</p> <p>⑥ 복원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p> <p>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p> <p>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p> <p>5. 복원사업의 분야별·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p> <p>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수생태계의 개선 효과</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2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6은 제29조의7로 이동 <2018. 1. 16.>]</p> <p>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6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1. 16.></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6에서 이동 <2018. 1. 16.>]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p>제28조(정기적 조사·측정 및 분석) ①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측정 및 분석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물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고시하고, 그 호소의 물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물환경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측정 및 분석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호소의 생성·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측정 및</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분석해야 한다. 다만,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측정 및 분석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3년마다 1회 2. 제3항제3호의 사항: 5년마다 1회 3. 제3항제4호의 사항 가.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3년마다 1회 나.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사·측정 및 분석하는 경우: 5년마다 1회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0. 15.> [제목개정 2018. 1. 16.]	
제29조 삭제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해당 호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면관리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으면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①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31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저수지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역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본조신설 2012. 7. 5.]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1조의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역금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 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 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17.> </p> <p>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p> <p>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21. 4. 13.> </p> <p> ⑥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p> <p>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1. 4. 13.> </p> <p>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4. 13.>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1. 4. 13.> [전문개정 2013. 7. 30.]</p>		
<p>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6.></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p> <p>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p>	<p>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20., 2014. 11. 24.,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p>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p>	<p>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 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p>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p> <p>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지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p> <p>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p> <p>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p> <p>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p> <p>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10. 16.></p> <p>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p>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4.,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p>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 3., 2014. 11.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 	<p>10., 2024. 11. 7.></p> <p>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3.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②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3.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4.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p> <p>[전문개정 2013. 7. 30.]</p>	<p>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p> <p>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p> <p>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p> <p>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p> <p>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p> <p>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p> <p>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개정 2019. 10. 15.></p> <p>⑦ 법 제33조제1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9. 10. 15.></p> <p>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집수시설(集水施設)</p>	<p>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p> <p>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p> <p>5. 제1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p> <p>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4. 4.></p> <p>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p> <p>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p> <p>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신설 2023. 4. 4.></p> <p>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p> <p>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p> <p>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p> <p>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p> <p>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저류(貯留)시설</p> <p>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p>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p>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p> <p>⑤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개정 2023. 4. 4.></p> <p>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p> <p>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p>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p> <p>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p>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p> <p>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p> <p>2.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p>	<p>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p> <p>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도면</p> <p>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p> <p>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p> <p>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p> <p>나. 삭제 <2021.12.10></p> <p>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p> <p>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p> <p>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7.,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②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p> <p>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시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p>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0.></p> <p>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 1. 3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24. 1. 30.></p> <p>[본조신설 2015. 12. 1.]</p>		
<p>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 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1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영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계획서 및 그 도면 3. 영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 및 그 도면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2024. 11. 7.></p> <p>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p>
<p>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의 특성과 사용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양 및 수질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p> <p>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p> <p>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정상별 저장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도면</p> <p>다.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p> <p>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p> <p>가. 제4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폐수배출 시설에 사용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그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 공정도. 다만, 폐수를 재이용한 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한다.</p> <p>나. 삭제 <2021.12.10></p> <p>다.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처리계약서</p> <p>라.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사용처 및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p> <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p> <p>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p> <p>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7.,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사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사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35조에 따른 측정기기부착 대상사업장만 제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명세를 포함한 공동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p>② 공동방지사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에게 공동방지사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사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부담한다.</p> <p>③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방지사설의 폐수처리능력 2. 공동방지사설의 수질오염물질처리방법 3. 공동방지사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36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6. 12.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p>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폐수배출량 또는 그 사업장의 수</p> <p>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p>
<p>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p>	<p>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 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 관에게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 시작일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 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9조부터 제41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 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 취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 에 제33조제1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에 맞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 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 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 는 경우 <p>[제목개정 2014. 1. 28.]</p>	<p>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 조제2호·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p>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 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 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 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 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2. 폭발의 위험 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석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뒤 쪽에 희석대상 폐수의 폐수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및 희석량 등을 적어야 한다.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다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p> <p>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p>③ 사업자 또는 방지사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11.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별지 제21호서식 <p>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사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개정 2024. 11. 7.></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4.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수의 배출형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다만,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만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p>	<p>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 1. 17.></p> <p>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8., 2014. 1. 28.,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6.></p> <p>③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1. 26.></p> <p>④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6. 1. 27.,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3. 7. 30.]</p>	<p>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p> <p>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2.></p> <p>④ 시·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동·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1. 16.></p> <p>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p> <p>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p> <p>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p> <p>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p> <p>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p> <p>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p> <p>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선정방법·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p> <p>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개정 2017. 1. 17.></p> <p>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p> <p>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초과한 배출량</p> <p>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p> <p>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개정 2010. 2. 18., 2023. 4. 4.></p> <p>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한다)</p> <p>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p> <p>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p> <p>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 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p>	
<p>제38조의3(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p>②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p>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9. 10. 15.>]</p>	<p>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을 것 3.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할 것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p>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p>	<p>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p>	<p>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p>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p> <p>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p> <p>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p>	<p>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2. 31.></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p> <p>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p> <p>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p> <p>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p> <p>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p> <p>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p>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고·검사의 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 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산처리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p> <p>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7. 1. 17.]</p>	<p>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4., 2020. 11. 24.></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0. 11. 24., 2023. 4. 4.></p> <p>③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3. 4. 4.></p> <p>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p>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p>	<p>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p> <p>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p>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p> <p>[본조신설 2017. 1. 17.]</p>	<p>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11. 7.></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2024. 11.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 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목개정 2017. 1. 19.]
제38조의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9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6. 1. 27.]		
제38조의8(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행받은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다른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 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p>		<p>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 1. 19.]</p> <p>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p>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5., 2017. 1. 19.></p> <p>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p>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9(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38조의7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의7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의 관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5.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본조신설 2017. 1. 19.]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관리대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기술인력·장비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p> <p>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p>	<p>제39조(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p>	<p>제47조(시운전 기간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4. 1.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다만,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p>	<p>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p> <p>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p> <p>가.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p> <p>나. 방지사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p>	<p>우에는 가동시작일부터 70일로 한다.</p> <p>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p> <p>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신고(가동시작일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사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도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 2014. 1. 29.></p> <p>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p> <p>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p> <p>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p> <p>4.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p> <p>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수질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p> <p>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p> <p>③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p> <p>제51조(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12. 31.></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p> <p>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배출시설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p> <p>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p> <p>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7.></p> <p>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8.></p> <p>④ 영 제4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작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18.></p> <p>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p> <p>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p> <p>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p> <p>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p> <p>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p> <p>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p> <p>⑥ 공동방지사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 4. 4.></p> <p>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 부터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 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p> <p>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3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② 시·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1. 기본배출부과금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 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p> <p>2. 초과배출부과금</p> <p>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p> <p>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에 따른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p>	<p>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p> <p>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p> <p>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p> <p>④ 공동방지사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개정 2010. 2. 18., 2023.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24시간 자료(이하 “24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되지 않은 경우 <p>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p> <p>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9. 11. 26.></p> <p>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⑦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1. 4. 13.></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24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 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p> <p>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18.></p> $\text{기준초과배출량} \times \text{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times \text{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times \text{지역별 부과계수} \times \text{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text{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유출계수} \cdot \text{누출계수}) \times \text{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p>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p> <p>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p> <p>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p> <p>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p> <p>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p> <p>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p> <p>⑥ 공동방지사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⑦ 측정기기부작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18., 2017. 1. 17.></p> <p>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p> <p>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p> <p>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p> <p>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p> <p>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p> <p>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 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p> <p>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p> <p>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p> <p>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p> <p>라. 3년 이상: 100분의 50</p> <p>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p> <p>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p> <p>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p> <p>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p> <p>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p> <p>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신인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지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한 경우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지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지설의 설치가 면 	제83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되는 자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p> <p>9.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p> <p>10.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p> <p>12.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13.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15.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3. 7. 30.]</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p>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19. 11. 26., 2021. 4.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4.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p>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p>	<p>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p> <p>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p> <p>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p> <p>⑤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 4. 4.></p> <p>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 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p> <p>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사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의 검사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결과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내용, 방법, 조사시기 및 결과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17.]</p>		<p>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본조신설 2018. 1. 17.]</p>
<p>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2. 검증 결과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p> <p>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p> <p>② 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와 그 검증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③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및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받은 자를 말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해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 17.]</p>
<p>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자발적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7. 1. 17.]</p>		
<p>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p>	<p>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p>	<p>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p> <p>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p> <p>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p> <p>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p> <p>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p> <p>[제목개정 2014. 1. 28.]</p>	<p>와 같다.</p> <p>1.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3.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p> <p>4.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p> <p>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p> <p>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p> <p>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p> <p>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3.></p> <p>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p> <p>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p> <p>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가 곤란한 경우</p> <p>4. 그 밖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2024. 11. 13.></p> <p>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p> <p>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p> <p>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p> <p>[제목개정 2017. 1. 19.]</p>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6.1.27>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2016. 1. 27., 2017. 1. 17., 2020. 5.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목개정 2016. 1. 27.]</p>	<p>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개정 2009. 6. 26., 2010. 2. 18., 2011. 10. 28., 2012. 7. 5., 2017. 1. 1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2019. 10. 15.>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p>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28., 2017. 1. 17.></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p> <p>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p> <p>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개정 2016. 1. 27.></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p>	<p>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2017. 1. 17.></p> <p>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신설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p>	<p>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p>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28., 2017. 1. 17.></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p> <p>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p> <p>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p> <p>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p>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개정 2017. 1. 17.></p> <p>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신설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p>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28., 2017. 1. 17.></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p> <p>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p>	<p>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p>	<p>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2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p> <p>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p> <p>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p>	<p>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7. 1. 1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처리용량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폐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확장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확장하는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p>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 17.]</p> <p>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p>[제목개정 2017. 1. 19.]</p> <p>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갖추어 두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p> <p>②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4.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액하는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5. 인근 지역으로부터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경우</p> <p>6.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설치하려는 경우</p> <p>7. 영양염류(營養鹽類: 인·질소 등 염류의 총칭을 말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량하려는 경우</p> <p>[제목개정 2017. 1. 17.]</p>	<p>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1. 19., 2018. 1. 17.></p> <p>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17. 1. 19.]</p> <p>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p> <p>① 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p> <p>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 19.></p> <p>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p> <p>[제목개정 2017. 1. 19.]</p>
<p>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1. 27.></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p>	<p>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p>[전문개정 2018. 1. 17.]</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p> <p>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신설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p>제49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49조의4(수용 및 사용)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p>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변경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제49조의5(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한다.<개정 2016. 1. 27., 2021. 4. 13.></p> <p>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1. 4. 13.></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49조의7(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 및 제49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27., 2017. 1.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p>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p> <p>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p> <p>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p> <p>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1. 27.></p> <p>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p> <p>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1. 27.></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6. 1. 27.]</p>		<p>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p>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p> <p>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p> <p>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p> <p>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p> <p>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p> <p>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있다. [전문개정 2019. 10. 17.]</p> <p>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p> <p>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p>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9.]</p>
<p>제50조의2(기술진단 등)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p>		<p>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없다.</p> <p>③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준용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p> <p>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p> <p>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p> <p>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p> <p>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9. 10. 15.></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5.></p> <p>[제목개정 2017. 1. 17.]</p> <p>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p>	<p>제72조(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전문개정 2017. 1. 17.]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3.7.30>		
제52조(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 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5. 5. 26.>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1. 11. 23.>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개정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2012. 7. 20., 2017. 1. 19.>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p> <p>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p> <p>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p>2021. 1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p>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21. 1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p>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p>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0. 4. 2., 2014. 12. 31.,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p>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 계획 <p>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6.></p> <p>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개정 2018. 10. 16.></p> <p>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13. 7. 30.]</p>	<p>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 <p>[제목개정 2019. 10. 15.]</p> <p>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개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p>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p>	<p>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p> <p>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p> <p>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p> <p>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p> <p>⑥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4. 2., 2015. 6. 16., 2019. 12. 31., 2020. 11. 27.></p> <p>⑦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5. 6. 16., 2019. 12. 31.></p> <p>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p>	<p>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p>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개정 2010. 4. 2., 2014. 1. 29., 2015. 6. 16.,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p>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전.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p> <p>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p> <p>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p> <p>② 법 제5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9., 2019. 10. 17.></p> <p>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p> <p>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19. 10. 17.></p> <p>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개정 2019. 10. 17.></p> <p>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1. 29.,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p>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개선명령의 내용)</p> <p>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은 설치·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운영기준과 설치·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제53조의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내의 지역 3. 특별대책지역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5.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p>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3. 3. 22.]</p>	<p>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p>[본조신설 2013. 12. 30.]</p>	<p>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p>
<p>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53조제5항 본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p>		<p>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서를 함께 제공하는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6.] [중전 제53조의3은 제53조의5로 이동 <2018. 10. 16.>]</p>		<p>와 같다.</p> <p>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p>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p>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0. 2. 3.] [중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7로 이동 <2020. 2. 3.>]</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2.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본조신설 2018. 10. 16.]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10. 16.> 1.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2.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3. 비점오염원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 시·도별, 소관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 시·도별, 소관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9. 10. 15.> ④ 법 제5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5.>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제78조의3에서 이동 <2020. 2. 3.>]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5.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p> <p>6. 그 밖에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⑦ 제2항제4호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0. 16.> [본조신설 2016. 1. 27.] [제53조의3에서 이동 <2018. 10. 16.>]</p>	<p>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p> <p>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p> <p>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p> <p>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5.> [본조신설 2017. 1. 17.]</p>	
<p>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p>	<p>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2018. 1. 16., 2021. 11. 23.></p> <p>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물환경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p>	<p>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절한 관리방안을 말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지역</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p> <p>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저수지를 포함하는 지역</p> <p>나.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포함하는 지역</p> <p>다.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을 포함하는 지역</p> <p>라.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어류폐사(斃死) 및 녹조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마.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3. 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불투수면적률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p> <p>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p> <p>5. 삭제<2021. 11. 23.></p> <p>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p> <p>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p> <p>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p> <p>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p> <p>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p> <p>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p> <p>③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0. 16.>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사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사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지사, 관계 시·군·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기술개발·연구)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 1. 29.]
제58조(농약잔류허용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정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써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p>	<p>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p>
<p>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3.7.30></p>		
<p>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p>		<p>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2021. 4. 13.></p> <p>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 2021. 4. 13.></p> <p>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p>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p> <p>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p> <p>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10. 16., 2021. 4. 13.></p> <p>[전문개정 2013. 7. 30.]</p>		<p>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p> <p>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p> <p>③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만 해당한다)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2017. 1. 19.></p> <p>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p> <p>2.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제출 관청과 기타수질오염원이 같고, 입지제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6. 16., 2017. 1. 19.></p> <p>[제목개정 2015. 6. 16.]</p> <p>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p> <p>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에 대한 개선명</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령) ①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개정 2019. 10. 17., 2021. 12. 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6. 16.]
제61조(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①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高毒性)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에 대하여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1. 19.>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 10. 16.>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 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7.>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p> <p>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p> <p>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p> <p>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p> <p>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p> <p>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p> <p>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p> <p>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p> <p>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10. 16.></p> <p>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6.></p> <p>[본조신설 2016. 1. 27.]</p>		<p>1부</p> <p>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p> <p>3. 수질의 검사주기가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p> <p>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p>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9. 10.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신설 2023.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p> <p>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개정 2019. 10. 17., 2023. 4. 4.></p> <p>[본조신설 2017. 1. 19.]</p> <p>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p>
<p align="center">제6장 폐수처리업</p>		
<p>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p> <p>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1. 17.></p> <p>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p> <p>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p> <p>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 2019. 11. 26.></p> <p>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p>		<p>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p> <p>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p> <p>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니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2024. 11. 7.></p> <p>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p> <p>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⑦ 삭제<2021. 12. 10.> [전문개정 2020. 11. 27.]</p> <p>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의 변경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업장 소재지의 변경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p>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p> <p>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p> <p>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7.> [본조신설 2020. 11. 27.]</p> <p>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4. 1. 29., 2019. 12. 31.></p> <p>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신설 2020. 11. 27.></p> <p>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1. 27.></p> <p>④ 폐수처리업자가 수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20. 11. 27.,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수 2. 제4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3. 폐수배출시설 외의 보일러, 그 밖의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p> <p>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p> <p>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 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 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 11.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2. 9., 2017. 1. 19., 2020. 11. 27., 2024. 11. 13.>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목개정 2017. 1. 19.]
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7.> 1.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p> <p>5. 폐수처리시설의 운전·유지관리계획서</p> <p>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p> <p>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세부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p> <p>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개선명령의 경우: 1년</p> <p>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p> <p>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p> <p>나. 조치명령의 내용</p> <p>다. 이행기간</p> <p>③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p> <p>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0.>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신설 2021. 12. 10.> [본조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1. 12. 10.]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가 취소(제63조 제1호·제2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3. 7. 30.]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1. 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p> <p>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p> <p>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p> <p>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p> <p>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p> <p>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2018. 10. 16., 2019. 11. 26.></p> <p>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p> <p>[전문개정 2013. 7. 30.] [제목개정 2019. 11. 26.]</p>		<p>다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명세</p> <p>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p> <p>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p> <p>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p> <p>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p> <p>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p> <p>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 12. 10., 2024. 11. 7.></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삭제<2021. 12. 10.> [전문개정 2020. 11. 27.]
제6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전문개정 2013. 7. 30.]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17., 2019. 11. 26.,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전문개정 2013. 7. 30.]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7장 보칙 <개정 2013.7.30>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제79조의3(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p>[본조신설 2019. 10. 15.] [중전 제79조의3은 제79조의4로 이동 <2019. 10. 15.>]</p>	
<p>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7.></p> <p>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p>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2023. 5. 23.></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p> <p>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p> <p>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p> <p>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검사에 관한 업무</p> <p>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p> <p>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p> <p>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p> <p>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2023. 5. 23.></p>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①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p>	<p>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5.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p>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3. 4.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p>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1. 19., 2014. 1. 29., 2015. 6. 16.,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적정성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수탁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p> <p>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p> <p>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24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p>	<p>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7.></p> <p>③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적은 서면을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이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30., 2014. 12. 24., 2017. 1. 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p>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p> <p>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p> <p>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 4. 4.></p> <p>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 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p> <p>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p>	<p>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수소이온농도</p> <p>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p> <p>[제목개정 2017. 1. 19.]</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p>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 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p>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p> <p>2.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p> <p>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7.]</p>	<p>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17. 1. 17.] [제79조의3에서 이동 <2019. 10. 15.>]</p>	
<p>제69조(국고 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충제거방법의 개선 2.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의 지정 5.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浚渫)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그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 허가의 취소, 공유수면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 유류저장시설, 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p> <p>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23. 1.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72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제3항·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p>[전문개정 2013. 7. 30.]</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53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106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5.,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규모별로 인건비·경비·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p>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20. 2. 3.></p> <p>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 2. 3.></p> <p>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2. 3., 2020. 11. 27., 2021. 12. 10.></p> <p>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p> <p>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p> <p>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p> <p>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p>
제7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기관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7. 1. 17.>	제81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9. 10. 15., 2020. 11. 24., 2021. 11. 23.>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삭제<2020. 11. 24.>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 17.> [전문개정 2013. 7.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의뢰 15. 삭제<2014. 1. 28.>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p> <p>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p> <p>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p> <p>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p> <p>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p> <p>20의2.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고의 접수</p> <p>20의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p> <p>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p> <p>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p> <p>23. 법 제6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p> <p>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p> <p>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p> <p>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p> <p>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p> <p>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 2021. 11. 23.>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0. 삭제<2019. 10. 15.>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 · 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p> <p>12. 삭제<2021. 11. 23.></p> <p>13. 삭제<2017. 1. 17.></p> <p>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 한 조정</p> <p>1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 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 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p> <p>14의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 · 고시</p> <p>15. 삭제<2015. 5. 26.></p> <p>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 폐 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자에 대한 조치명령</p> <p>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 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p> <p>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 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p> <p>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 료의 접수</p> <p>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 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p> <p>17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 출량조사 결과의 접수</p> <p>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 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p> <p>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p> <p>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p> <p>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p> <p>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p> <p>22.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p> <p>22의2. 법 제5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p> <p>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p> <p>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p> <p>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p> <p>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4, 제3호의5,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4. 1. 28., 2018. 1. 16., 2019. 10. 15., 2020. 11. 24., 2021. 11. 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 기준의 설정 5.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생태유량의 산정 5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및 분석 6.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6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류발생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예측정보의 제공 6의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p>제83조(보고)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10. 15.></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개정 2012. 7. 20., 2018. 1. 16., 2019. 10. 15., 2023. 5. 23.></p> <p>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17. 1. 17., 2018. 1. 16.,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3의2. 법 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에 관한 업무 3의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자원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9. 10. 15.>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1. 11. 23.> ⑤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9. 12. 24., 2019. 10. 15., 2021. 11. 23., 2023. 5. 23.>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개정 2013.7.30>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div>물환경보전법</div> <div>[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div>	<div>물환경보전법 시행령</div> <div>[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div>	<div>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div> <div>[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div>
<div>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자</div> <div>[전문개정 2013. 7. 30.]</div>		
<div>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 <div>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div> <div>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div> <div>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div> <div>4. 삭제<2016. 1. 27.></div> <div>5.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div> <div>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div> <div>7.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div> <div>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div> <div>9.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div> <div>9의2. 제3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div> <div>10.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div> <div>10의2.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div> <div>11.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div> <div>12.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div> </div>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13.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p> <p>13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p> <p>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p> <p>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p> <p>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p> <p>16. 삭제<2019. 11. 26.></p> <p>17.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6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p> <p>3.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p>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전문개정 2013. 7. 30.]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9. 11. 26.>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아니한 자</p> <p>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p> <p>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p> <p>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p> <p>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댐시금지구역에서 댐시 행위를 한 사람</p> <p>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p> <p>3. 삭제<2017. 1. 17.></p> <p>4. 삭제<2017. 1. 17.></p> <p>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 하지 아니한 자</p> <p>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p> <p>6.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을 운영한 자</p> <p>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 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 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10. 16.></p> <p>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p> <p>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댐시 제한구역에서 댐시 행위를 한 사람</p>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p>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p> <p>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p> <p>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3. 7. 30.]</p>		

